

농업·농촌 발전계획 ③

농업·농촌발전
품목별 세부계획

2004. 12.

농림부

목 차

제1장	쌀산업종합대책	1
제2장	원예산업분야대책	27
제3장	축산업분야대책	65
제4장	산림·임업분야대책	95

제 1 장

쌀 산업 종합 대책

I. 쌀산업의 여건 및 전망

- '04년말 재고는 710만석으로 예상되며,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기조 지속 전망

	1996	2001	2002	2003	2004(P)
생 산 량	3,696만석	3,830	3,422	3,091	3,473
1인당소량	104.9kg	88.9	87.0	83.2	81.8
재 고 량	169만석	927	1,005	763	710

- 국내외 가격차가 4~5배 수준인 상황에서 WTO/DDA 협상과 2004년 쌀 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등 시장개방 폭은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
 - 쌀협상이후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소비자 시판 허용예상
 - DDA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규정
-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을 전망
 -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 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단가 인상이 곤란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가격의 지속하락시 보전 수준이 미흡할 가능성
 - 0.5ha 미만 쌀농가 : ('95) 496 천호 (41.2%) → ('03) 428 (43.5%)
 - 60세 이상 농가 : ('95) 634 천호 (42.3%) → ('03) 726 (56.8%)
- WTO 보조금 감축 등으로 추곡수매의 수확기 물량흡수 및 가격 지지 기능은 위축되고, 이를 보완할 민간유통기능은 취약
 - '03년 농협 RPC 200개소중 45%인 90개소가 적자

Ⅱ. 쌀산업종합대책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 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수입쌀과의 경쟁심화,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이 예상
 -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감축으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
- ◆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필요
- ◆ 장기적인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 구축
 - 정부는 식량안보의 확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시장감시 및 소비자 보호, 농가소득의 안정에 집중
- ◆ 시장원리 강화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기능 재정립
 - 소규모·영세농 중심의 생산구조는 개방폭 확대시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소농대책도 마련하여 병행 추진
 - 국회동의제·이중가격제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수매제를 개편하고 정부의 수급조절기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강화
 - 소비자의 고품질 쌀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고급화·시장감시기능 확대 추진

쌀산업 종합대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목 표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



정책 방향

시장중심
유통체제

농 가
소득안정

생산기반
유 지



수매제
개편

민간유통
활성화

농가소득
안전망확충

품질
고급화

경영규모
확대

정부 추곡수매
제를 공공비축
제로 전환

RPC 구조조정
RPC경영합리화
RPC수탁판매
활성화
RPC매입능력
확대

논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개편
친환경직불제
확대

고품질 품종
보급확대
고품질 쌀
생산시설확충
표시제도 개선
품질평가강화
정부쌀고품질화

경영이양
직불제 개편
영농규모화
사업 개편

Ⅲ. 쌀산업종합대책 추진방안

1.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추진배경> : WTO 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제 개편 불가피

□ WTO 출범 이후 보조금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들어 따라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와 수급조절기능 위축

-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과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으로 수매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경우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확보도 어려울 전망

* 수 매 물 량 : (95) 955만석 → (00) 629 → (03) 521

□ 시장가격의 참조가격 역할을 하는 수매가가 시장가보다 높아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왜곡이 심화

* 수 매 가 : (95) 133천원/80kg쌀 → (00) 161 → (03) 168

* 시 장 가 : (95) 125천원/80kg쌀 → (00) 159 → (03) 163

<추진목표> : 변화되는 여건에 적합한 양정시스템 구축

- 현행 추곡수매제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제도 정비('04~'05)
- 공공비축제의 도입 및 정부쌀 관리방식 전면 개편(05)

<추진방안>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 현행 추곡수매제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

○ 도입시기 :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05년산부터 도입

○ 비축목표

- 흉작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600만석 내외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비축물량 매입

- 비축물량은 수확기 매입물량 등으로 충당
- 수확기 지역별 산지가격으로 매입

○ 비축물량 보관

- 정부비축용 창고 신축·창고관리 체계화 추진
- 민간의 우수한 창고와 도급계약을 체결

○ 비축물량 방출

- 회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
- 비축물량은 공매 등을 통해 유통업체에 판매
- 연간 방출계획을 사전 고시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 정부쌀 직접 공급은 군수용 등으로 최소화

- 정부수매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과 민간유통기능 중심으로 전면개정 추진중('04.11.9, 국회 법안제출)
 - 국회동의제 폐지, 공공비축 도입근거 마련, 양곡의 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

-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해 '05년까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적정재고 수준으로 감축
 -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조정·논에 타작물 재배 등 추진
 - '03~'05년 기간중 매년 27,500ha 수준의 생산조정제 실시
 - * 생산조정제의 지속 및 확대여부는 수급상황, 쌀재협상 및 DDA협상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 논콩 재배사업 면적은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 대체작물 지원(종자대 등)을 통해 최대한 밭벼 재배 억제
 -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및 특수 이모작지에 타작물 재배유도
 - 필요한 경우 주정용 등으로 재고특별처리 추진
 - 수입산 타피오카를 대체하여 주정용 공급 추진
 - 여건이 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추진 등
 - 쌀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쌀소비촉진대책 지속 추진
 - 젊은 층, 주부 등을 겨냥한 “Love 米” TV공익광고 등 전개
 - 쌀가공기술·가공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확대

2.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추진배경> :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 도모

□ WTO/DDA 및 쌀 협상으로 쌀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면 쌀값 하락이 전망되고, 영세한 우리 쌀농가의 소득감소 등 충격이 예상

* 0.5ha 미만 농가가 428천호(43.5%)로서 전체 생산의 13%수준 담당

* 2ha 이상 농가는 86천호(8.7%)로서 전체 생산의 32% 수준 담당

□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개방시 '13년 국내쌀값이 80kg가마당 10~12만원 수준이 되어야 함(농경연 추정)

○ 80kg 가마당 생산비가 10만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5% 수준

○ 경영규모에 따라 생산비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시 영세농가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

* 10a당 생산비 : (0.5ha 미만) 572천원/10a, (5ha 이상) 494천원

□ 쌀값 하락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율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 확대 필요

* 10a 당 소득 : ('01~'02 평균) 726천원, (2013) 535~539천원

<추진목표> :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 육성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영의 규모화 추진

○ 6ha 수준의 전업농이 전체생산의 절반 수준을 담당

○ 소규모 농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친환경농업쌀 등 특색미 생산을 통해 틈새시장 확보

<추진방안> : 경영이양직불제 및 영농규모화사업 개편

□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 대상농가 :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업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안의 논
- 지급조건 : 탈농을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일정규모의 55세 미만의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5년 이상 장기 임대
 - 취미 또는 자가소비 목적의 영농은 허용(0.1ha까지)
- 지급기간 : 경영이양일로부터 만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급
- 지급단가
 -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는 농지대금은 최장 10년 동안 분할 지급을 원칙
 - 농지매매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는 가산 지급
 - 농지매매대금은 분할지급외에 50% 선급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 도입
 - * 매도시 월 수령액 : 241천원/ha(연 2,896천원/ha)
 - 장기임대시에는 2,977천원/ha를 일시불로 지급
- 경영이양된 농지는 2ha 이상의 55세 미만 농업인에 집중 지원
 - 사업물량('04~'10년) : 83천ha

□ 규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농규모화 사업 개편

○ '13년까지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집중 육성

- 벼 재배면적의 50%이상(450천ha)을 전업농이 담당
- 쌀전업농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총 164천ha의 규모화 추진
 - 2~5ha 규모의 농가에 대하여 120천ha의 영농규모화 등 지원
 - 전체 규모화 필요면적(164천ha) 등 44천ha는 농가자력으로 규모화

○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원자금 확충 및 지원조건 개선

- 영농규모화 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정부출연금 확대
- 매매사업의 금리인하와 원리금 상환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안정적 임대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차 장려금제」 도입 추진
- 경영주체의 청·장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55세미만의 지원상한 연령 하향 조정

* '05년부터 매년 1세씩 인하, '09년부터 50세 기준 적용

○ 농지수급 조절 및 농지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05)

- 농지매매정보를 수집하여 전업농에 알선하거나 농지신탁 기능을 통해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추진

3. 쌀농가 소득 안정

<추진배경> :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 예상

□ 쌀은 농가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

○ 쌀은 농가소득의 20%, 농업소득의 50.8%를 차지

	<u>1995</u>	<u>1998</u>	<u>2002</u>	<u>2003</u>
농 가 소 득(A)	21,803 천원	20,494	24,475	26,878
농 업 소 득(B)	10,469	8,955	11,274	10,572
쌀 소 득(C)	3,984	4,826	5,289	5,369
비 중(C/A, C/B)	48%, 18%	44%, 24%	47%, 22%	51%, 20%

□ 시장개방 폭 확대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쌀산업의 정착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안정 장치 확충 필요

○ '03년 611만원/ha 수준인 쌀 소득은 '14년 535~593만원/ha 수준으로 감소 예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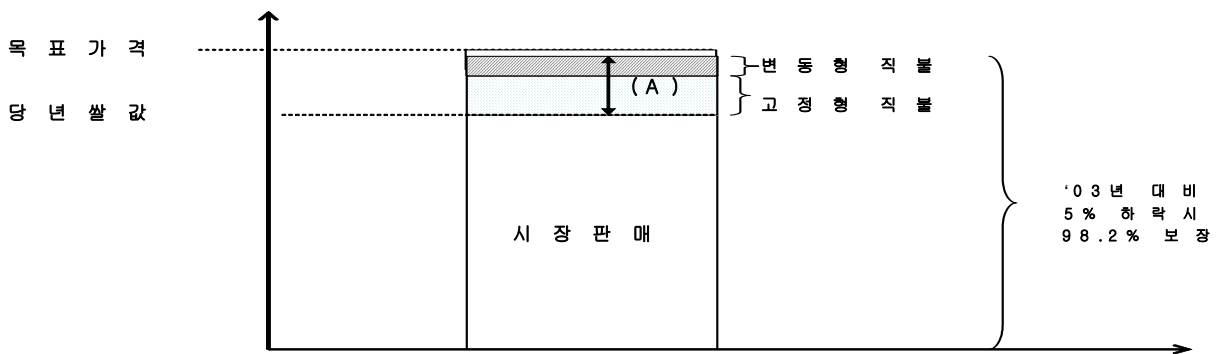
○ WTO 보조금 감축으로 쌀 소득보전직불금도 AMS 제약을 받을 전망

○ 논농업직불제는 구조조정 저해 및 증산유인 등의 문제점

<추진목표> :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 마련

<추진방안> :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충

- 논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성격의 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직접지불제로 개편
 - 담수의무, 친환경 영농의무 등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지급요건은 폐지하고, 농지보전의무 부과
 -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유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배품목은 자유화하고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대상은 실경작자에 대해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쌀 가격 하락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제로 개편
 - 쌀 농가의 최근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 가격과의 차이의 80%(A)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대책 발표 (11. 11)



* A : (목표 가격 - 당년 쌀 값)의 일정부분

- 목표가격은 '01~'03년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03년 논농업직불을 감안하여 결정(170천원/80kg)
 - 목표가격은 3년간('05~'07년) 고정하여 3년 단위로 조정
 - * '03년 산지쌀값(162천원) 대비 5% 하락시 167천원 수취(목표가격의 98.2%)

- 직접지불은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나누어서 지급
 - 고정형직불 :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60만원/ha 지급(농업진흥 지역 및 비진흥지역 평균)
 - 변동형직불 :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0%가 고정형 직불금보다 클 경우 추가 지급

-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유기농업은 물론 저투입농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
 - 논과 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 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확대
 - 가입대상은 외부효과 제고 및 이행점검을 위해 마을, 들녘,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 작목반 등으로 확대
 - 지구단위의 경우 일정규모(예시 5ha) 이상의 집단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친환경농업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 농업인의 경우 일정규모(예시 5ha)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친환경 인증농산물(저투입~유기) 생산 농업인
 - 지급요건은 i) 재배과정에서 비료·농약의 사용 절감, ii)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iii) 지력증진 의무 등 검토
 - 지급단가는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직불제 지원대상 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

4. 고품질 쌀 생산 · 유통체제 정착

<추진배경> : 우리쌀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

- 현재 우리쌀의 외관상 품위는 외국의 고급쌀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싸래기 · 분상질립의 함유비율이 높은 편
 - 관능적인 맛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정착 · 품질관리 등이 미흡하여 외국의 고급쌀에 비해 우수하지는 못한 상황
- 우리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고급화 저해요인 해소 필요
 - 고품질벼 종자의 개발 · 보급이 미흡하고, 매년 정부추천품종의 변화가 커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 미흡
 - 재배관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논의 지력이 떨어져 화학비료 과다 사용
 - 현대화된 건조 · 저장시설 부족으로 수확후 관리가 부실
 - 소비단계에 고가 · 양질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RPC 등의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
 - 5~6월 이후 RPC 등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 수매물량의 품질이 떨어져 브랜드의 품질일관성 유지에 애로

<추진목표> :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입쌀과의 차별화 및 신뢰확보

- 지역별 대표 품종을 육성하고, 완전미 유통비중을 확대
- 시중유통 쌀의 점검 ·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정부수매벼 · 정부쌀의 품질을 시중유통쌀 수준으로 고급화

<추진방안> : RPC 중심의 고품질쌀 생산·유통체제 구축

- '04년부터 정부수매물량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수매물량의 품종별 수매·보관·방출 추진
- '04년산 정부수매물량은 시·군별로 3개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품종을 중심으로 실시
 - 시·군별로 시·군, 기술센터, 농관원, RPC 등 민간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정
 - 시군별 정부수매품종과 함께 추가제한 희망 RPC의 수매품종을 사전예시
 - 장기적으로 지역사정에 따라 도를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역 단위 품종통일 유도
 - * 품종제한시 정부 보급종 공급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급종 공급능력을 확대하면서 농가간 자율교환을 유도하고, 수매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원의 품종식별 능력을 배양 및 품종 관련 분쟁 방지 대책 마련
- '04년산부터 정부수매물량은 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공매도 품종별·등급별로 실시
 - 시·군별 3개품종 이내로 수매할 경우 현행 구분보관 방법과 동일하여 보관능력이 감소하지 않으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창고별로 단일 품종을 등급별로 보관
 - 5월 이후 RPC 등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 수매물량 공매도 품종별로 실시하여 품종별 유통체제 확립

- 학교급식용·군관수용 등 정부가 공급하는 **밥쌀용**은 수요처 1회 주문량을 가급적 **단일 품종**으로 공급
 - 재고부족 등으로 1회 주문량을 단일 품종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포대별로는 구분 공급

□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쌀 검사규격 강화**

- 현재 단일등급인 검사등급을 밥쌀용·가공용 등 용도별로 다양화
 - 학교급식 등 밥쌀용 검사규격은 시중유통쌀 수준으로 강화
- 일반계·통일계·수입쌀로 분리되어 있는 규격을 하나로 통합
- 싸래기, 분상질립 등 검사항목 용어에 대한 정의도 시중 쌀 유통규격 및 국제적(미국, 일본등) 추세에 맞도록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 육성 및 보급 확대 추진**

- RPC, 농업기술원, 지역대학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여 **지역대표 품종** 육성
 - 품종개발의 기본방향을 품질고급화에 두고 생육온도, 병충해발생 등의 지역적 특성이나 친환경미, 가공용 특수미 등 재배목적에 적합한 고품질품종의 개발 강화
 - 생력 직파재배 적응품종 등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품종개발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고영양 성분, 건강기능성 품종 등 다양한 기능성 특수미 개발

-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확대하여 '07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하여 2년 1기의 갱신체계 구축
 - '06년 이후 정부 보급종 전량을 고품질품종으로 공급
 - 신규 개발되어 등록된 고품질품종은 시험장으로부터 원종 종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가에 조기공급
 - 현재 16,000톤인 종자관리소 정선시설 현대화로 공급능력 확대
 - 고품질품종 재배확대 유도를 위해 RPC 계열화사업 확대계획과 연계, 정부 보급종을 RPC 위주로 우선 공급
- 들녘별 재배품종을 단순화하고 각 지역별로 대표품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단계별 표준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보급
 - 동일지역에서도 토질, 지력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개발
 - 밥맛과 수량을 동시에 고려한 지대별 적정 질소 시비체계 확립
 - 적정 파종·이앙시기, 재식거리·주당본수, 물관리, 수확시기
 -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재배 및 생산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하고 지도 강화
 - 지역별 표준화 기술실천을 위한 영농사업단지 구성,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패키지화 관리
-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해 논의 지력증진사업을 강화
 - 질소질비료는 정부지원에서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은 확대

- 유효규산 함량 부족논을 대상으로 규산질비료 시비 및 지도 강화
 - 읍·면별로 공급계획을 세워 4년 1주기 기준으로 연차적 공급
- 오염농경지, 경사지, 고랭지등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에 객토를 실시하여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대 지원 등을 통해 겨울철 논논에 녹비작물 재배로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RPC와 농업인간 고품질벼 계약재배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계약재배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RPC간 경쟁유도
 - 우수RPC의 「계약재배성공수범사례」를 수집·홍보실시
 - RPC관계자에 대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교육 실시
 - RPC의 계약재배품종을 사전예시하여 품종 통일 유도
 - 계약재배내용에 품종 농약사용, 시비관리·수확시기 등을 포함하고 계약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산물벼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조기 확충
 -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인 1,100만석(벼 224만톤)까지 처리능력 확대
 - RPC의 건조·저장시설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740개소 추가 설치

□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기반의 조성

○ 개정된 포장양곡 표시제도의 이행상황 지도·점검 실시

- 표시 불이행 및 허위표시의 경우 **처벌조항 강화** 추진

* 현행 양곡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미흡

○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중유통 브랜드 쌀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하여 브랜드쌀 품질관리체제 구축 촉진

‘03년도 브랜드쌀 평가

- 시행주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회원단체

- 평가대상 :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추천한 51개 브랜드

- 평가기준 : 쌀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종 혼합여부, 외관상 쌀의 품위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하고, 소비자 및 전문패널의 식미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브랜드를 선정(12개)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중유통쌀 품질 점검·평가기관 설립 유도

○ 고품질쌀 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 고품질쌀 식별방법 및 상미기간을 감안한 계절별 적정 구매단량, 취반방법, 가정내 보관방법 등 고품질쌀 소비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5. RPC 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추진배경>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따라 민간유통기능 확충 필요

□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대응하여 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역할 확대 필요

○ 그러나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 경영능력 부족, 공급과잉상황에 따른 계절 진폭 축소, 과당경쟁 등으로 RPC의 경영 악화

- '03년 농협 RPC의 45%인 90개소가 적자 시현
- 사업여건이 악화된 '97년 이후 부도 RPC가 29개소

○ 품질고급화 및 농가의 산물벼 처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RPC의 수확기 처리능력 뒷받침 미흡

- 건조·저장능력이 600만석 수준에 불과해 일부 물량 야적 불가피
- * '03년 농협야적물량 : 자체 매입량의 7%인 365천석

□ RPC는 그동안 수확후 일관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집중하여 왔으나 산지유통의 핵심체로서 역할 확대 필요

○ 소비자 수요를 농업인에 전달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질·가격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 공급

<추진목표> : RPC의 경영혁신을 통한 민간유통기능 강화

○ RPC의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하고, RPC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유통량의 70% 수준까지 확대

○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추진방안> : 경영평가를 통한 RPC 구조조정 촉진

- '04년부터 정부자금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지원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마련
 - 평가기준은 영업이익 등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되, 수확기 원료곡 확보, 고품질 쌀 생산 능력 등도 반영
 -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생산자단체와 민간사업자를 구분 평가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RPC는 집중지원하고, 미흡한 RPC는 지원감축으로 통합 유도
 - 통·폐합 및 사내분사화 대상 RPC를 구분하여 경영혁신 추진
 - 평가결과를 농협 등 관련단체와 협조, 연계 추진방안 강구
- 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RPC간 통합·합병을 유도하고 사내분사제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통·폐합 세부추진방안

- 추진방안 : 연합RPC 또는 합병(자율통합 유도)
 - 통합RPC는 조합경영과 분리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 추진대상 : 3년이상 적자시현 RPC, 경영평가결과 하위RPC
전체 RPC적자인 시·군RPC
- 지원방안 : 통합 RPC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지원시 우대

사내 분사 추진방안

○ 추진대상 : 희망조합RPC, 연합RPC를 중심으로 도입 추진

* 사내 분사제 도입 RPC수(누적) : ('04) 10개소 → ('13) 50개소

○ 추진방향 : 협약 범위내에서 **완전 자율경영**(독립성장화)

- 분사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판매와 손익목표만 부여하고 기타사항은 분사장에 권한 위임

- 분사장은 직원대상 공모 또는 외부전문가 임명

○ 농협중앙회를 통해 관련규정 및 운영준칙 마련

- 직제·급여·직무범위규정 등 분사운영 협약서 표준안 마련

○ 사후관리 : 결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

□ 경영·기술·판매 전문가 등으로 **RPC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RPC 운영 지원

○ 조직 : 농림부, 농관원, 농협, 민간협회, 유통전문가로 구성

○ 역할 : 경영부실 RPC 경영컨설팅자문, 관리방안 마련 등

○ 컨설팅 대상 : 경영부실 RPC(2년이상 적자 시현)

○ 컨설팅 진단 : 사업전반의 중점사항을 진단

○ 컨설팅은 농협 및 RPC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

□ RPC 경영개선 및 수확기 취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탁판매 활성화

○ 그동안 정부의 구매비중이 높고, RPC는 큰 계절진폭을 활용한 매취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농가도 경영규모가 작고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탁에 소극적

- 향후 정부구매량의 축소 및 공공비축제의 도입, 농가의 경영 규모화, 등을 감안할 때 수탁판매의 활성화가 필요

○ 단기적으로 농가와 RPC간 자율적인 사업으로 추진

- 제도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고품질쌀 계열화사업과 연계, 수탁판매 유도

· 농가와 RPC가 협의하여 정산시기, 정산방법(가격 등) 결정

· 수탁량은 농가희망, RPC저장능력 등 감안 자율 결정하되, 품종 통일 및 재배관리를 표준화하고 수탁물량은 별도관리

○ 중장기적으로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활성화 유도

- 기본방향 : 최종 판매가격에 의한 공동계산제 도입

- 계약단계부터 선도금을 지급하고 최종판매 후 일괄정산

- 가공출하비용 등 필요경비는 표준원가모델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 추진방안 : RPC 회원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발굴

IV. 2013년 쌀산업의 비전과 전망

- 쌀산업은 현재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02:98만호)의 구조에서 6ha 수준의 전업농이 전체 쌀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
- 경영이양직불제와 영농규모화 확대 등으로 전업농의 영농 규모는 '02년 4ha 수준에서 6ha 수준으로 확대
 - 마을별 2명 내외의 젊은 전업농이 마을 전체 논면적의 대부분을 농기계를 활용하여 일관작업 수행
 - 경영규모화와 함께 농작업 규모화가 진전되어 10ha 수준(직접 경영 6ha, 농작업수탁 4ha) 경작하는 전업농이 크게 늘어날 전망
- 겸업농(평균 1.2ha 수준)은 소규모 영농의 장점을 활용, 친환경·특색미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틈새시장 공략

	(현재)	(2013년)	(현재)	(2013년)
전업농	86천호 (평균 3ha)	70천호 (평균 6.0ha)	32%	56%
겸업농	471천호 (평균 1.2ha)	220천호 (평균 1.2ha)	55%	33%
자급·취미농	428천호 (평균 0.3ha)	310천호 (평균 0.3ha)	13%	11%

(규모별 농가수)
(생산비중)

- 농업인은 파종이전에 RPC와 품종·재배방법·물량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후 표준화된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
 - 생산된 벼는 수확기에 RPC가 지정한 시기별로 수확, 건조된 후 도정 예상시기에 따라 사이로, 평창고, 저온저장고에 보관
 - 농업인은 RPC에 벼의 판매를 위탁, 일정액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RPC는 시장에 판매후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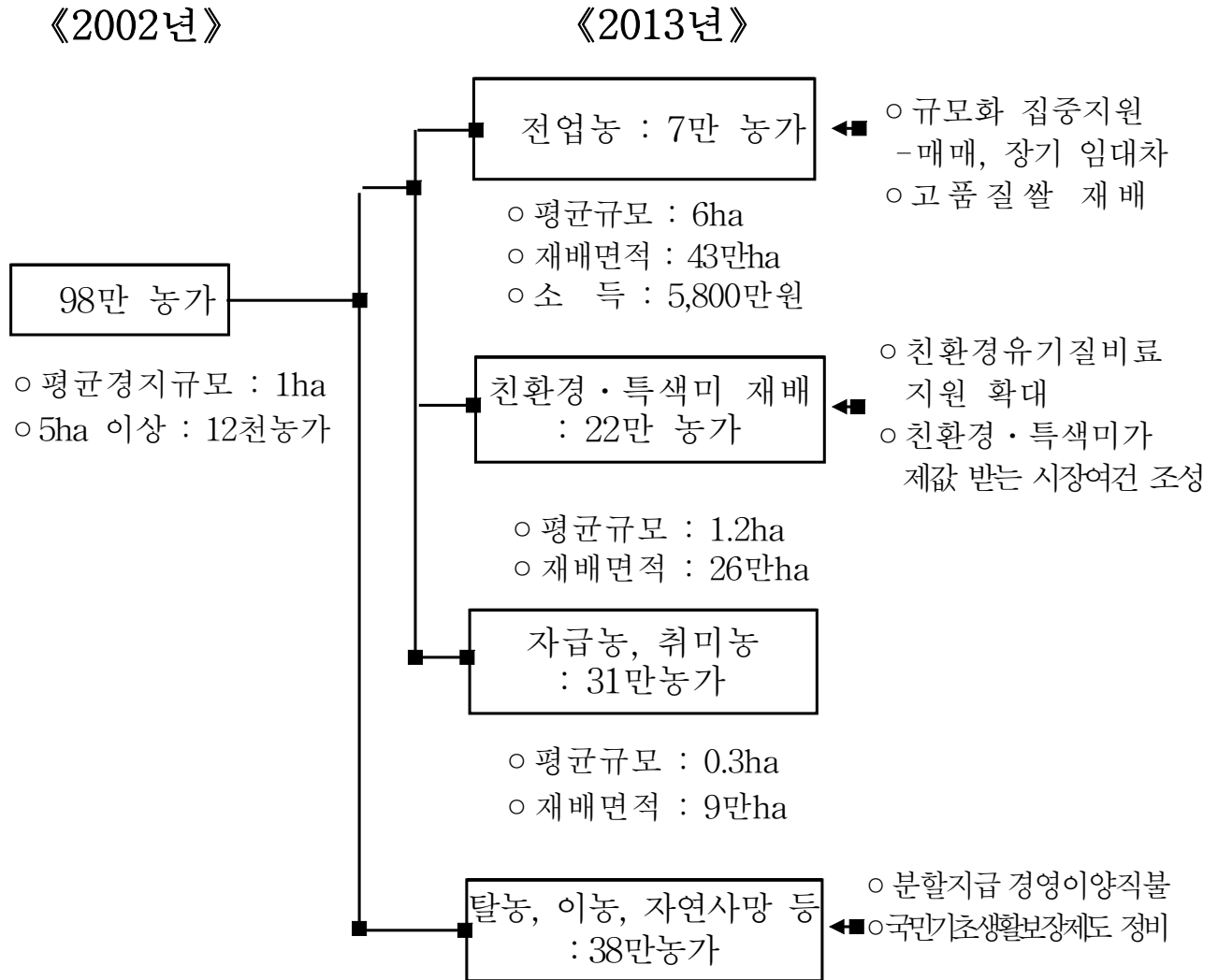
-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생산비 감소, 경영규모 확대, 쌀농가 소득 안정장치 확충 등으로 쌀농가 소득감소 충격 완화
- 전업농가(6ha 수준)의 소득수준은 쌀값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 유지 가능
 - * '13년 쌀농가소득 전망 : 전업농가 5,800만원(쌀소득 3,400, 직불금 소득 900)

- 정부수매 기능은 축소되어 쌀 유통은 민간중심으로 전환
- 연간 정부매입량은 300만석 내외의 공공비축으로 한정
 - 추곡수매제의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AMS 여유분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안정에 사용
- RPC의 수확기 매입량은 생산량의 21%인 650만석('03)에서 유통량의 70% 수준인 1,100만석으로 확대
 - 정부수매와 RPC를 통한 수확기 매입량은 현재 보다 확대
 - * 정부와 RPC의 수확기 물량매입('03) 1,171만석(정부 521, RPC 650)→ ('13) 1,300~1,400만석(정부 300, RPC 1,100)

- 시장개방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벼 재배면적은 '13년 80만ha 수준, 자급율은 90% 수준 유지

<참고>

쌀 농가의 구조 변화



* '03~'13년중 약 385천호(연간 35천호)가 자연사망, 이농, 탈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상당수가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경영이양

제 2 장

원예산업분야 대책

I . 원예산업의 현황

- 2000년 원예분야 생산액은 11조7,840억원(농업생산액의 37%)이며 '90년대 중반 이후 가격하락 등으로 정체 상태

	<u>'90</u>	<u>'95</u>	<u>'00</u>	<u>'95/'90</u>	<u>'00/'95</u>
- 농 업 :	17,728십억원	25,855	31,829	46%	23%
- 원예작물 :	5,997(34%)	11,697(45)	11,784(37)	95	0.7

* 가격지수 : (채소) ('90년) 94 → ('95년) 100 → ('00년) 78, (과수) 75 → 100 → 66

- 원예생산액 중 채소가 67,240억원(57%, 양념채소 23,355억원), 과수 25,800억원(22%), 화훼 6,649억원(5.6%)

- 생산면적은 90년대 초반에 많이 늘어났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정체추세이고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 추세

	<u>'90</u>	<u>'95</u>	<u>'00</u>	<u>'95/'90</u>	<u>'00/'95</u>
- 채소 :	317천ha/8,677천톤	403/10,568	386/11,282	27%/22	△4/7
- 과수 :	133천ha/1,766천톤	174/2,300	173/2,429	31%/30	△0.6/6

* 시설채소면적은 '90~'95, '95~'00년간 47%, 14%, 화훼면적은 138%, 34% 증가

- 양념채소의 경우 고추·마늘은 농가수·생산면적 모두 감소 추세이나 양파는 증가 추세

	<u>'90</u>	<u>'95</u>	<u>'00</u>
- 고추 :	1,160천호/87천ha	943/96	903/87
- 마늘 :	846천호/53천ha	574/45	540/39
- 양파 :	87천호/9천ha	81/11	113/16

- 과수·화훼농가는 전업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9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 추세

- 과수농가 : ('90) 107천농가 → ('95) 144 → ('00) 143
- 화훼농가 : ('90) 8,945농가 → ('95) 12,509 → ('00) 13,080

Ⅱ. 대내외 여건 전망

1. 시장여건의 변화

- DDA·FTA, 대형유통업체 확산에 따라 농산물유통이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급속히 이전
 - 산지에서부터 유통업체가 원하는 대량의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시장교섭력을 가진 산지마케팅 조직 필요
 - 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구매가격 인하압력이 가중되어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간의 직거래 수요 증대
- 안전성, 맛, 건강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보다는 품질과 소비자 신뢰확보가 핵심과제로 등장
 - 소비자는 안전성, 신선도 등이 불확실한 농산물 소비 기피
 - 안전성 관리, 이력추적관리제도, 검역 등에 대한 국제 논의 활발
- 원료 농산물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수요변화 가속화
 - 식품산업 부가가치가 96조원 수준으로 농업 GDP(20조) 4배이상 많고, 식재료 시장(12조원 추정) 등 새로운 수요가 급속 증가 추세
 - 농산물 소비중심이 가정에서 식품·외식·급식업체 등 소비지 대량실수요처로 이동함에 따라 이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수입농산물로 대체 예상
-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 확대로 공급여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는 정체되고 있어 수급불안 위험 증가
 - 수입가격이 상한으로 작용하고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나, DDA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은 더욱 제약될 전망

2. DDA 영향 전망

□ 전 체

- 선진국 기준으로 개방될 경우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차이

□ 양념채소

- 고율관세 품목군으로서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 확대시 수입증가로 재배면적 감소 등 생산조정 불가피
- 특히, 미작 중심으로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를 병행하는 소규모 복합 농가의 탈농 또는 작목 전환 증가 예상
- 차별화된 마케팅조직과 연계되고 규모화·생력화된 생산체계를 갖춘 전문농가와 소규모 관행농으로 양극화 전망

□ 과실류

- 품질이 우위에 있고 당분간 식물검역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어 경쟁력 제고 여건이 양호
- 생산성이 높고 규모화된 과원을 중심으로 고품질·안전상품으로 시장을 차별화하거나 수출 확대 가능 전망
 - 다만, 오렌지·포도 등 경합하는 수입 과실류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되면서 국산 과실류 소비 확대에 한계 예상

□ 시설채소, 화훼류 및 엽채류

- 관세가 이미 낮아 영향이 크지 않고 고품질 위주로 내수기반 유지 및 수출 확대 가능 전망
- 다만, 쌀·양념채소 농가의 작목전환에 따른 연쇄 과잉위험 내재

Ⅱ. 증장기 정책 기본방향

< 정책 목표 >

-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시스템 혁신
- ◇ 국산 농산물 신규 수요창출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제 구축

① 산지유통센터 중심으로 산지유통을 규모화

- 규모화 · 전문화 · 기업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의 육성
- 산지유통센터(APC) 중심 과일·채소의 계약재배·규격화·브랜드화 실현

② 물류혁신 및 유통경로 다원화로 유통비용 절감

- 파렛트 출하 촉진,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물류 혁신
-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전자상거래 및 민간유통·가공업체의 산지 직거래 활성화

③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GAP, 이력추적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복잡한 인증표시제 간소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를 신뢰제고

④ 식품·외식산업,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 신규 수요창출

- 「생산-물류-해외 마케팅」의 일관 계열화 수출진흥 기반 구축
- 식품가공·급식·외식업체 등 대량 실수요처와의 연계강화 및 소비촉진

⑤ 생산자 주도 자율적 수급조절

-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조직하여 생산자 자율 수급안정 강화
- 품목군별 특성에 상응한 계약재배사업의 발전 및 내실화

⑥ 개방화에 대응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가격·품질 경쟁력, 생산구조 등에 따라 4대 품목군으로 분류
- 품목특성에 따라 규모화, 품질·안전성 제고, 수급안정 등 핵심과제 추진

Ⅲ. 중점 추진시책

1. 차세대 산지유통 주체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 계열화

◇ 광역화·전문화·시설화된 차세대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 ('05) 10여개 → ('08) 100개 → ('13) 200개 (군 또는 주산지 단위 1~2개)

◇ APC에 대한 지원강화로 고품질 상품화 능력 확대

* ('02) 주요 원예상품 생산량의 9% 처리 → ('10) 50% 수준

◇ 규모화된 우수브랜드 육성

* ('13) 전체 브랜드 농산물의 50% 공동브랜드화

□ 차세대 산지유통주체로서 「공동마케팅」 조직의 적극 육성

- APC 독립채산, 전문 CEO 책임경영,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혁신요소를 구비한 전문화·규모화된 공동마케팅조직 지원
 - 기존 산지전문조직, APC의 공동마케팅 전환을 적극 지원
 - 규모화된 거점산지조직, 산지조직간 사업연합, 지자체·유통업체와 산지조직간 공동투자법인 등 다양한 유형간 경쟁 유도
- 광역기반 마케팅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유통시설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에 무이자 계약재배자금 전품목 지원('04년 과실·채소약정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자금 선급금 우선 통합)
 - 마케팅지원자금(3년, 1%), 공동선별·파렛트출하 촉진자금 등도 공동 마케팅조직, 우수산지유통전문조직에 집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품목대표단체와의 마케팅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 * 지자체별 시설지원 또는 출자확대, 브랜드 개발 및 판촉
- 공동마케팅조직 및 가입 회원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 공동마케팅조직 가입 회원농가에 농업종합자금 지원심사시 우대
 - 최저가격보장제 개편과 연계한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우선 도입
- 유통전문CEO 채용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활용시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외국인근로자 우선배정업체 지정

□ APC(208개소)의 산지계열화 역량 강화

- 고품질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요 원예상품의 50% 처리 수준까지 산지유통시설 지원 확대
 - 세척, 선별, 가공, 전처리시설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시설 보완
 - 대규모 APC(시설규모 30억원이상)는 ①군단위이상 광역기반조직, ②독립적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공동마케팅사업 조직에 우선 지원
 -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을 확대(국고 50%, 지자체 50%)
 - * 시설지원 예산확대 '03년) 85억원 → '04년) 229억원 ('04~'13년 3,900억원 지원)
- 사업성과평가에 따른 자금 인센티브·퇴출 적용
 - APC독립회계 여부, 판매사업 책임경영체제, 전문인력 배치 등 평가
 - 공동계산율, 파렛트 출하율 등 목표관리제를 도입, 우수조직에 대한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지원·성과부진조직 자금지원 중단
- 활용도가 낮은 APC 등 유통시설을 임차 또는 M&A하는 경우 인수조직에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및 시설보완 우선 지원
- 품질관리사제 도입과 연계,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신상품개발·마케팅 혁신 등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지원체계 구축
 - 수확후관리기술 교육, 품목별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가 풀과 연계한 사이버컨설팅 운영
 - 산·학·연 연계 지역클러스터를 통한 현장 기술·경영컨설팅지원체계구축
 -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매년 450명)

□ 브랜드 육성 및 관리의 중점 추진

- 브랜드 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 브랜드공모전 개최 및 브랜드 초기 개발 비용 지원
- 주요 품목별 지역공동브랜드를 전국대표브랜드로 발전을 유도
 - 공동마케팅 조직 등을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브랜드 보호를 위한 등록 등 법적 근거 마련

< 공동마케팅조직 >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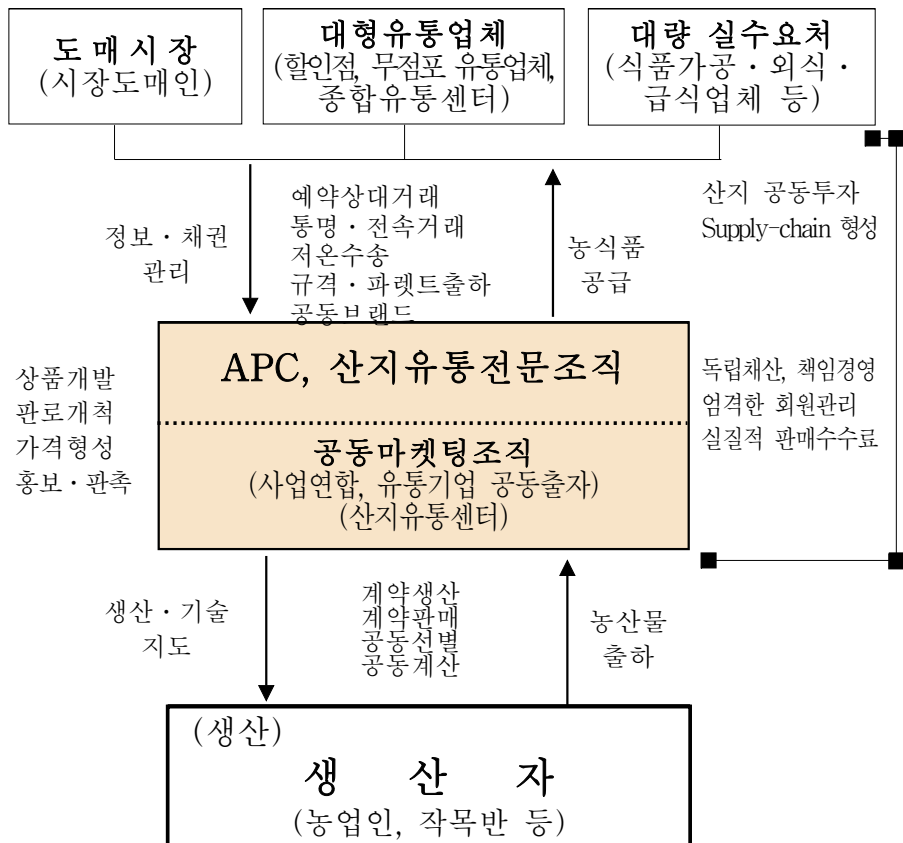
- ① 운영 : 독립채산·전문책임경영, 회원농가 출하협약 체결, 출하권 출자 및 판매를 통한 자본확충 및 경영참여, 자조금 조성
* 출하협약 핵심내용 : 품종·재배법 통일, 공동선별·계산, 공동브랜드, 의무출하 등
- ② 사업 : 군단위 이상 광역사업, 2~3개 대표브랜드, 틈새품목 구비, 단순 선별·저장·포장에서 전처리·가공으로 사업영역 확대
- ③ 시설·장비 : 저장·상품화 시설, 선진 위생·안전설비·물류시스템 완비

□ 조직 유형

- 거점산지조직형 : 산지전문조직, 광역조합 중심으로 공동마케팅
- 사업연합형 : 농협법(안)에 의한 공동사업법인, 조합간 사업연합 등
- 전문마케팅법인형 : 마케팅자회사, 조합·유통식품업체간 공동출자회사

<참고>

새로운 산지유통 체계



2. 물류혁신 및 정보화에 의한 유통비용 절감

- ◇ 종합유통센터와 도매시장의 유통비중 제고
- ◇ 파렛트 출하율을 '02년 5%에서 '07년 50%로 제고
-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단계별 정보화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

가. 농산물 물류체계 효율화 및 도매유통 활성화

- 파렛트 출하,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물류효율화 적극 추진
 - 파렛트 사용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강화
 - 공동선별비용,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규격출하 지원
 - 파렛트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 우선 하역·경매, 하역비 면제 등 우대
 - * 무·배추의 도매시장 포장거래 방안 강구
 - 표준하역비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물류개선 기반 확충
 -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 강구
 - 하역인력의 법인 직원화 등 하역체계 개선
- 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경로 정착
 - 직영점·체인화사업 확대 등 종합유통센터의 도매기능 활성화
 - 친환경·안전농산물, 식자재·학교급식, 온라인시장 등 사업 다각화, 대형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 농산물 직거래사업 내실화를 통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 마련
 - 산지와 소비지유통업체의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우수 농축산물 상품설명회 개최 및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강화

□ 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경매 이외에 선취·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
 - 품질관리를 전제로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출하한 농산물은 경매하지 않고 선취 또는 상대 매매하는 방안 검토
 - 출하자의 시장교섭력이 확보된 경우 정가·수의매매 허용 확대
- 고품질·친환경·공동선별·특산품 등을 우대하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는 방안 강구
 - 신유통업체가 요구하는 定量·定品·定時·定포장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 신유통업체를 고객화
- 도매시장운영 관련 규제완화와 관리평가 강화
 - 새로 개장하는 강서도매시장 등은 공정거래·기계화하역 등 모범적 운영형태를 지향토록 하고 시장도매인제도의 연착륙 추진
 - 도매시장법인의 매취상장 및 경영사업범위와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도매시장 평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통합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설치(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의 노후시설 정비 및 시설보완계획 수립·추진

- 가락시장은 연차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거래량 포화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신선농산물 처리 역량 강화
 - 도·소매 분리, 하역기계화, 영업장 재배치, 저온저장시설 확충(cold chain system 구축과 연계) 등 종합 정비 추진
- 지방도매시장은 거래물량, 상관행 등을 감안, 선별·포장·저장 등 물류기능 등을 추가하여 종합유통시설로 발전 지원 검토

나. 디지털 통합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유통단계별 정보화 기반구축으로 산지 조직화를 가속시키고 산지와 소비지의 거래 효율화

○ 산지유통센터(APC)에 판매, 회계, 주거래선 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농업ERP) 보급

- 생산조직의 경영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기초 DB 축적

○ 산지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에 품목별 회원생산농가 DB를 구축하여 계약재배,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에 활용

- 출하실적관리로 지속적인 출하농가에 대한 혜택 실질화

* APC평가결과 최우수조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5)

○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및 도매시장 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통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 도매시장과 APC를 연결하는 전자 수·발주 시스템(EDI) 도입

- 경락 가격, 물량 정보와 출하지원 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 도매 시장 출하자에게 법인별 경영실적 공개

○ 종합유통센터간 정보 공유를 위한 공급망관리(SCM) 구축

- 도매법인, 농산물 유통회사, 대량 소비처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주문·물류 정보의 공유

* 농협직영유통센터 중심으로 SCM 시스템 도입('05)

□ 전자상거래에 의한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 전자상거래(B2B, B2C)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거래가능 상품 개발
 - 전자상거래 인증 및 거래 표준약관 개발 및 시행('05)
 - GAP 등 고품질 농산물의 online 직거래 및 홍보 지원
 - 농수산물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진출을 원하는 생산농가 지원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무선인식(RFID) 표준 제정

- 현재의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물류표준의 대안인 농산물 유통 분야의 RFID 표준안 작성
 - 농산물의 생산정보, 유통내역, 안전성 등이 포함된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저대역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인식표를 부착하여 물품을 인식하는 장치
- 물류관리에 적용되는 경우 물류비절감과 효율화 달성 가능
 - 인적자원 투입없이 자동으로 데이터 인식, 집계, 분류, 추적이 가능
- 기존 바코드에 비해 수용가능한 정보량이 많으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

* 2005년 경북과 공동으로 농산물 분야 시범 적용

□ 농업 부문 경영자의 정보화 능력 향상 프로그램

- 농산물 유통교육과정에 경영자 DB운용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
 -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경영 기법전수

3.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진제(Traceability)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품목에 대한 GAP 농산물 관리지침 완비
 - Codex · 미국 · EU의 GAP기준을 토대로 농약 · 중금속 · 미생물 등 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품목별 관리지침 마련
 - * GAP 인증기준은 정부가 마련하되, 인증은 생산자단체 등이 주관
 - GAP 이행의 필수사항인 교육체계를 구축 · 운영
 - 선진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 교육장소 마련 및 교관양성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GAP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지원 방안 강구
 - 오폐수 처리 · 위생설비 등의 장비를 GAP 농산물 생산단지 · 산지 유통센터 등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안전성 문제 발생시 생산단계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당해 농산물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실시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우리나라 현실 여건을 감안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06년부터 시행
 - 신속 · 정확한 Recall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장유입 방지
 - 산지 거점 시·군에 정밀분석실을 확충하고 안전성 조사를 확대
 - 정밀분석실 : ('03) 9개→('09) 47, 안전성조사 : ('03) 58천건→('13) 90
 - 안전성 조사 범위도 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 등으로 확대 ('07)
 - 안전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불이익 조치 등 다양한 제재로 재발 방지('04~)
 - 위반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D/B화하여 관리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농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입체적인 제재 실시
 - * 안전성조사 위반자에 대해 의무적인 안전성 교육 실시
 -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부적합 식품의 생산 및 출하자에게 정책자금 지원 금지 등 불이익 조치
 - 산지별 안전성조사 실적을 공개하여 산지의 경각심 고취
 - 생산자가 활용 가능한 안전성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확대 추진
 - '13년까지 미생물 농약 33종 추가개발, Codex의 기준에 부합되는 미생물관리 및 검정기술 개발·보급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09까지 1,000개 수준으로 확대 설정

-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
 -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소비자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지원 확대
 - 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식품안전자문단 본격 운영('04)
 - 법령, 리콜, 검사실적 등 농식품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식품안전 포털사이트」 구축('05)

- 안전제도 참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우대를 받도록 하여 산지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장에서 가격우대 받도록 안전성 인증농산물(친환경, GAP, Traceability)에 대한 홍보강화 추진
 - 공중파 방송국(KBS·MBC 등)과 공동으로 GAP, Traceability 관련 홍보용 다큐제작 방영
 - 상장수수료 인하, 출하촉진자금 금리인하 또는 배정 확대 등 도매시장에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값 받도록 추진
 - 농산물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표시제, 인증제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추진
 - 연구용역 추진 및 각계의 의견 수렴('04) 후 개편방안 마련

4.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체계 구축

- ◇ 자조금 단체 결성 및 사업범위 확대로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마련
 - * ('13) 34개 주요 품목에 대한 자조금 단체 결성
- ◇ 유통협약·유통명령제를 내실화하여 자율적 농산물 수급조절 장치 마련
- ◇ 계약재배 확대와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으로 수급안정 강화
 - * 계약재배물량 : 적정생산량의 23%('13)

□ 품목대표조직의 육성 및 자조금단체화 유도

- 품목대표 조직으로서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협의회 결성 촉진
 - 기존 과수연합회, 인삼연합회의 기능을 실질화
 - 기타 과실, 채소류 등은 사단법인 협의회 형태를 인정
- 품목 대표조직의 생산농가 조직화 수준 및 자율적 사업능력, 개방성 등의 평가 후 자조금단체화
 - * ('02) 참다래 등 5개품목 → ('03) 10개 → ('13) 34개 주요 전품목
- 재배지역이 전국에 산재된 품목은 지역단위 자조금단체로 지원
 - 주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시·도단위 자조금단체를 결성한 후 전국단위 조직으로 육성·발전
 - * 자조금에 지방비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 (지방비 20%, 국비 30, 자부담 50)

□ 자조금조성 지원 및 자조금 사업범위의 단계적인 확대 유도

- 자조금 한도 확대 및 발전단계별 정부 지원 차별화
 - 자조금 조성을 연간 출하량의 1% 이내에서 품목특성에 따라 최대 3%까지 상향조정
 - 조직화 년도 및 규모, 활동실적 등을 평가,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100%에서 200%까지 단계적 차등화
 - * 보조금지급일부터 3년이내 50%이상 출하량 확보를 못할 경우 지원비율 1:0.8로 감축, 출하량 70%이상 자조금단체 1: 2까지 확대

- 품목대표조직의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유도
 - * (초기)교육·홍보 → (확대)출하·품질규제 → (발전)물량배정 및 대상자 추천
 - * 순수 홍보성 행사경비는 자조금 사업에서 삭제
- 유통협약·유통명령제를 실질적 농산물 수급안정장치로 운영 활성화
 - 유통명령 발동요건 및 단속강화로 유통명령의 실효성 제고
 - 유통협약, 명령에 따른 홍보비, 손실 등 지원
- 계약재배사업 주체 다양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수급안정 강화
 - 채소수급안정사업의 규모를 적정 생산량의 23%까지 확대하되, 산지유통능력을 우선적으로 제고
 - * 노지채소 : ('13) 20%, 시설채소 : ('10) 35%
 - 사업주체를 공동마케팅조직, 가공식품업체,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상농가를 0.3ha이상·생산량의 50%이상 계약재배 농가로 제한하고 위약농가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사업평가 기준을 품목군별로 차별화하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 공동마케팅조직, 우수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계약재배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계약재배자금 지원품목제한 폐지
 - 중장기적으로 모든 선급금, 농가 매취자금을 유통종합자금으로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차등지원
- 최저보장가격제도를 개편,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시행
 - 계약재배 사업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정책을 개편
 - 계약재배 사업의 결손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도입
 - '06년도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 추진
 - 시범사업 : 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당근 등('05)
 - '06년도부터 품목별·단계별로 추진

계약재배사업 개선방안

< 현 황 >

- 원예상품의 마케팅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하여 산지유통 전문조직사업과 과실·채소류 계약재배사업을 각각 추진 중
- 산지조직에서는 농가 출하선도금의 공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금이나 지원금리, 기간, 대상자 선정 등 지원방법에 차이
 - 산지유통전문조직자금 국고 9,103억원(3년거치 3%)
 - 계약재배자금 국고 8,365억원(10년 무이자)
 - * 노지채소(무·배추 등 7개품목) 4,460억원, 시설채소(오이·호박 등 5개품목) 1,777, 과실(사과·배 등 4개품목) 2,128

< 과제와 개선계획 >

- 시장확대 개방시 계약재배만으로 수급을 안정시키기는 어렵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상품화 및 마케팅 활성화 연계 시급
- 그러나 엄정한 선정과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우수한 산지조직에 집중 지원된 전문조직자금이 오히려 금리가 높은 문제점
- '04년부터 계약재배자금을 마케팅 성과가 우수한 산지조직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종합자금으로 통합
- '04년 과실·시설채소 약정출하자금을 우선적으로 산지유통전문 조직에 배정 지원 및 대상품목 제한 해제
 - 계약재배 핵심농협과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평가절차 통합
-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은 최저가보장 개편등과 연계, 개선방안 마련
- 농안기금 개편방안과 연계, 농가 선도금 용도 자금 사업 통합

5. 식품·외식산업, 수출확대 등 농산물 신규 수요창출

◇ 전통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

*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외식·급식 업체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 농축산물 수출목표액 : ('13) 50억불

가. 식품산업 육성

□ (가칭)「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04)

- 대표적 연관산업인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 법안 주요 내용(안) 〉

-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식품산업육성심의회 및 지역식품산업육성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산지가공공장·전통식품산업(명인제, 품질인증제 등)의 지속적 육성
- 외식산업·식재료산업 및 식품제조업의 육성·지원 등

□ 농산물 가공공장·특산단지의 운영활성화 및 명인제도 다양화 등 전통가공식품의 육성기반 구축

- 농산물 가공공장(현재 : 623개소) 및 특산단지(현재 : 681개)는 신규 확대보다는 시설현대화·판매홍보 등 운영활성화 역점 추진
-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명인제도('03년 현재 금산인삼주 등 24명)를 주류중심에서 장류·한과류 등으로 다양화하고 마케팅 지원

- 전통주 및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 수요확대 지원
 - 민속주, 농민주 제조·판매와 관련한 규제완화 및 지역별 전통주 활성화 추진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규격화 지원 강화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
 - 전통식품(인삼, 고추장 등)의 Codex 규격화 추진
-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전통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제도개발 및 기존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전통식품 「지리적 표시제」는 마크보호에서 명칭보호로 전환하여, 지역적 명칭을 토대로 한 농식품의 실질적 보호효과 제고
 - 상표법 개정을 통한 명칭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등 도입
- 건강식품시장의 성장에 대비하여 우수 국산원료농산물의 발굴 및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Health Claim) 방안 강구
 - 건강식품에 적합한 우수 국산원료 발굴 및 기능성 검증에 관한 연구개발을 산학연계로 추진 (R&D)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기획연구 및 첨단기술과제로 추진
 - 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해 주요국에 상품개발·등록 등 추진

나. 소비촉진 홍보

- 외식업체 · 전처리업체 · 학교급식 업체 등의 우수농산물 사용촉진
 - 최근 급성장하는 외식산업('00:29조원) · 전처리산업('02:2조원)에 일정비율이상 우수 농산물 구매와 연계한 자금 지원 추진
 - 지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조례제정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부터 우선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지원 추진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대책 추진으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 추진
 - 지자체별로 농식품 홍보와 함께 농업·농촌 문화이벤트를 개발하여 풍부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의 소비자에게 전통식품·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혁신을 위한 이미지 마케팅 추진
 - 홍보효과가 큰 TV 등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방안 강구

 -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대량수요처에 대한 소비 촉진·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 정기적인 우수 농식품 설명회 개최, 정보 Network 구축 및 주산지-식품업체간 계열화 지원 등
 - 농업·농촌 홍보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및 홍보 총괄기능을 강화
- * (가칭) 「농촌홍보센터」를 설치하여 홍보 전문성 확보, 홍보시기 및 소비촉진 마케팅 프로그램간 협력·조정 기능 등 수행

다. 수출확대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운영을 계기로 선진화된 생산-유통-수출 시스템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이미지를 구축
 - 규모화된 수출(500만불 이상)이 가능하고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대표브랜드(Whimori)사업 추진
 - * 공동대표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광양, 마산)를 수출농산물 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성과를 보아 시설확충 및 신규건설 추진
-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로 육성
 - 「원예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생산단지('03 : 108개)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매년)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물류비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국가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수출마케팅 실시 및 유망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 전략 수출시장에 대한 해외농업무역관을 확충하여 바이어 발굴, 수출알선,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기능을 강화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요자·유망업체 중심으로 수출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수출컨설팅 지원을 강화
 - * 수출관련 자금은 유망품목·업체중심으로 지원하고, 수출물류비의 경우 DDA협상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검토

6. 개방화에 대응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품목군별 특성에 상응한 정책차별화

- ◇ 가격·품질 경쟁력, 생산구조 등에 따라 품목군을 분류
- ◇ 품목특성에 따라 계열화, 규모화, 품질·안전성 제고 등 핵심과제 추진

양념채소

- : 주산지 APC 중심 생산·유통계열화, 브랜드화로 시장 차별화**
- 주산지 APC중심 계열화로 고품질 브랜드, 생산비 절감
 - 최저보장가격제 개선, 생산자조직 중심 전략적 마케팅 강화
 - 주산지 구조조정 지원, 경쟁이 어려운 영세노령농가 연착륙

무·배추

- : 계약재배·연합판매 확대, 물류비 절감, 대량수요처 확보, 안전성 강화**
- 계약재배 확대·내실화, 품목대표조직 중심 수급안정
 - 주산지 산지유통조직 광역화 및 마케팅 촉진, 지자체 참여 확대
 - 신제품보급, 기계화, 친환경 유기재배 확대 등 선도농 육성

시설채소·화훼

- : 에너지 절감, 생산자조직·전문단지 활성화, 수출확대**
- 전문생산단지·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
 - 주산지간 연합마케팅에 의한 년중 공급체제 구축, 생산자 자율수급
 - 수출거점단지 조성, 컨설팅 강화, 권역별 화훼유통센터 설치

인삼·특작

- : 안전성 확보, 수출확대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
- 인삼의 안전성 확보, 생산-가공-판매 계열화, 기능성 제품개발
 - 인삼의 해외마케팅 강화, 당귀 등 약용작물 GAP 및 생산이력제 도입
 - 녹차의 지역브랜드 및 지리적표시 강화, 우량 버섯종균 지원

과실류

- : 권역별 거점 APC중심 계열화,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체제 도입**
- 공동선별·출하·포장,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유통체제 구축
 - 『고품질과실브랜드』 집중 육성
 - 선도농가 중심 과원 규모화, 키낮은 과원 조성, 품목별기술협의회 구성

< 양념채소 >

◇ 고관세로 국내외 가격차가 큰 반면 품질차별성은 미흡하여
DDA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品目群

- 품목조직과 연계한 산지유통의 조직화로 생산·유통을
계열화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추구
 - 권역별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조직을 연계하여 생산·가공·
판매의 계열화
 - 고추는 주산단지 및 시·군 단위, 마늘·양파는 유통시설의 원료
권역별로 품목조직화
 - 주산단지 또는 시·군단위로 산지유통조직을 결성하고 해당지역
품목조직의 생산물량을 수매하여 가공 및 브랜드화 판매
 - 품목조직에는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지원과 신품종, 새로운 재배
기술의 우선 보급 및 교육
 - 산지유통조직에 일관처리 가공시설설치, 시설보완 및 기자재 지원
 - 고추는 가공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 가공공장은 일관처리가 가능한
시설현대화 지원
 - 마늘·양파는 일관수확기계, 수확후 품질관리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설치·시설보완 지원
 - 소비자 구매행태 및 선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품질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선도농 중심 신품종보급·기계화 등 경쟁력제고 대책추진

- '13년까지 규모화된 선도농을 고추 10, 마늘 5천농가 육성
 - 생산비를 일반농가에 비해 25%이상 절감하고 단위수량은 50% 이상 증수 등 선도농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
- 선도농을 권역별 품목조직의 핵심으로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기술 및 품질관리를 선도
 - 농진청 및 품목특화연구소를 통한 기술교육과 경영안정지원
- 종구갱신, 신품종 우선 보급 등으로 노력비 절감 및 품질향상
 - 마늘 주아재배(생산비 20% 절감)를 '08년 40%, '13년 70%로 확대
 - 고추는 수확회수 절감형(5~6회 → 1~2회) 품종을 개발('04)하여 선도농가부터 시범 보급(수확시 생산비 절감효과 9%)
-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현장적응성 강화 및 신규 개발 촉진
 - 마늘 기계화율을 현재 20%에서 '13까지 70%로 확대(생산비 12% 절감)하고, 고추 정식·수확기 등 시범 보급
 - 양파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시스템 도입(생산비 25% 절감)
 - 품목조직 참여농가, 공동이용을 전제로 지원하여 농기계의 실용화를 위한 기본적인 수요를 창출
- 주산단지 중심으로 3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16,000ha)에 밭 기반정비를 추진하여 관수시설, 농로 등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전국단위 품목대표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 품목조직과 연계된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권역별 품목 대표조직화를 유도하고 광역조직으로 확대
- 품목별 전국협의회가 품목대표조직으로 기능재편시 우선인정

□ 최저보장가격제에 의한 가격지지방식의 전환 추진

- 수입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 국내 시장가격은 수입산이 결정하므로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가격지지는 의미 상실
- 현행 최저가제도는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문제, 외국농산물의 수입 유발문제 등 부작용 초래로 제도 전환이 불가피

< 최저보장가격제도 전환 기본방향 >

- ① 가격지지 → 손실지원 + 산지유통 발전
 - ② 모든 농가에 대한 일반 지원 → 선도농 중심 경영안정 지원
 - ③ 개별농가 지원 → 품목별 산지유통조직의 역할강화 지원
- '04~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 '06년부터 단계적 전환

□ 농가 경영안정과 주산지 구조개선사업 지원

- 경쟁이 어려운 비주산지 농가에 대해 밭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으로 경영안정
- 주산단지중 여건변화로 재배규모 축소, 재배지역분산 등으로 경쟁력제고사업 효과가 낮은 지역은 구조조정 지원
 - '13년까지 고추 30%, 마늘 20%의 주산단지 지정해제로 면적 감축
 - 사업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역발전연구, 교육훈련, 대체작물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 제품개발 등에 대해 포괄적 지원
 - 투자계획 : 2,400억원(국고 1,920, 지방비 480)
- 규모화된 주산단지는 생산비절감, 부가가치제고 등 경쟁력제고 지원
 -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설치, 브랜드개발 및 연합마케팅, 홍보·판촉사업 등에 대해 포괄적 지원
 - 투자계획 : 3,200억원(국고 2,560, 지방비 640)

< 무·배추 >

◇ 국내·외 가격차가 적어 유통개선, 안전성 확보 등 차별화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品目群

□ 계약재배사업의 참여주체 다양화, 대상농가 제한 등 사업의 내실화 및 연합판매 활성화 등 마케팅 기능 강화

- 사업참여 주체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법인, 수출업체 법인에서 민간대형유통업체, 저장업체, 가공업체 등으로 확대
- 계약재배 참여농가를 일정규모(0.3ha) 이상 농가로서 생산량의 50%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로 한정
 - 계약성실 농가와 위약농가 신상필벌 강화로 계약문화 조기 정착
- 계약재배 물량의 등급화, 포장규격화,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 상품성 향상 촉진 및 연합판매사업을 통한 마케팅 강화
- 김치공장 등 안정적인 대량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유통·가공기업과 생산자조직 공동 APC 설립 지원

□ 파렛타이징·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물류비 절감

- 계약재배를 통한 출하의 규모화·규격화와 연계하여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이용 지원 확대
 - 파렛트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 우선 하역·경매, 하역비 면제 등 우대

사례 1 : 정선농협 배추 파렛트 규격출하 및 공동계산제 실시

- 계약재배물량의 90%이상을 규격화하여 김치공장, 농협종합유통센터와 직거래 (5,661톤, 2,263백만원 출하, 가락시장보다 평균 40% 이상 높은 가격 수취)
- 작목반 단위 계약, 분산파종·출하, 녹비작물 재배 등 품질향상 노력 병행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친환경 유기재배 등 안전성 확보
 - GAP 도입을 통해 과종에서부터 시비 및 농약사용 등 재배 표준화
 - ('05) 시범사업→('06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 계약재배물량이 시장에서 차별화되도록 안전성, 친환경 재배와 연계하여 추진
 - 주산지 APC 중심 친환경 브랜드 확산

- 채소 농기계임대사업 및 무·배추 전처리 시설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부가가치 증대
 - 배추일관기계화 시스템(1set당 10~15ha)을 2013년까지 20% 수준으로 보급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 생산자 조직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지역별 차별화된 무·배추 전처리 및 소포장 시설지원
 - 무 세척 및 소포장, 배추 전처리 시설지원으로 부가가치 증대
 - * 아산도고/종가집김치(세척채소), 대관령원협/롯데삼강(절단세척양상추)

사례 2 : 해남 화원농협의 절임배추 가공 판매

- 인터넷 주문거래를 통해 신세대 주부 12,000여명을 회원으로 확보
 - 매출액 : ('02) 40억원 → ('03) 59 → ('04P) 70
- 급속냉각기술 도입으로 유통기간 연장(3 → 7일), 일반배추보다 50%이상 높은 가격 수취

- 배추 생산자협의회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유도
 - 현재 조직된 겨울배추 및 고랭지배추협의회를 대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 시범사업 실시
 - 자조금으로 홍보·교육비 등 활용수준에서 자체 수급안정사업까지 확대유도
 - 자조금 지원확대 및 차등지원 체계 마련

< 시설채소 · 화훼 >

◇ 가격차도 크지 않고 품질이 우위에 있는 品目群

- 전문생산단지 ·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지원
 -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 자동환경 조절시설, 보온커튼, 일사량 감응 변온관리시스템 등 지원
 - UR이후 지원되어 부실운영 중인 유리온실이 젊고 경영 노하우 있는 자에게 양도, 양수될 수 있도록 지원
 - 젊고 유능한 경험 있는 인력이 인수 경영하는 경우,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주산지 생산자조직간 사업연합을 활성화하여 년중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브랜드화 · 품질표준화로 안정적 판로 확보
 - 사업연합을 통해 주산지 집중도가 높고 지역별 출하시기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상시 공급체계 구축
 - 주산지 집중도(10개 시·군) : 오이(59%), 애호박(56), 가지(81.0), 풋고추(73), 토마토(59.4)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광역연합사업조직 또는 조합 · APC간 계열화 체제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에 시설채소 약정출하자금 집중 지원

<사례> 애호박 시차별 연합마케팅(공동브랜드 : 태극애호박)

* 출하시기 : 광주(11~6월), 강원(6~10월) ⇒ 상시공급

11월 ~ 5월

광주 동곡농협

6월 ~ 10월

강원 홍천농협

* 판로 : E마트, 롯데마트, 삼성테스코 등, 판매가격 : (일반) 16천원/8kg, (태극애호박) 24

- 수출전문생산단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수출거점단지 육성
 -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수출용GAP를 우선 도입하고, 안전성모니터링,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확보 등 수출전문생산단지 관리 강화
 - GAP 도입: ('04) 파프리카 → ('05) 토마토, 오이 → ('06) 연차적으로 전품목 확대
 - 지자체, 생산·유통·수출업체, 지방대학이 참여하는 30~50ha 규모의 첨단시설채소 수출거점단지를 조성
 - 거점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기존 수출단지과 시설경영체를 통합하여 100~200ha 규모의 전문수출단지로 발전

- 첨단시설 재배 기술·경영에 대한 농업교육과 실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원예 컨설팅센터」 설치 검토
 - 컨설팅센터, 실험·실습실, 실습실 온실, 기숙사 등 3,000평 규모 3개소 설치
 - 파프리카, 토마토 등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교육·실습 프로그램 마련
 - * 설립형태, 운영주체, 운영비용 확보 등은 추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화훼 내수기반확대 및 선진유통을 선도할 권역별 화훼 종합센터 건설
 - 화훼 주산지 및 소비지를 고려하여 전국을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현대화된 종합센터 건설
 -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포장·품질규격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고 화훼물류장비 표준화
 - 저온습식유통 정착을 위한 습식상자 공동이용 및 화훼 파렛트사업추진

< 인삼 · 특작 >

◇ 고관세로 가격경쟁력은 낮으나, 고품질 · 브랜드화 등을 통해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군

인삼 : 생산단계별 안전성 확보와 국내 · 외 홍보 강화에 중점

- 국내산 인삼의 단계별 안전성 확보 방안,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외국산 인삼과의 차별화 유도
 - 생산전단계는 『예정지관리표준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자율적인 인삼포신고를 위해 「인삼신고포안전성구축사업」 추진
 - 토양분석, 심경, 연작 등 조사로 인삼재배지 적합여부 판단
 - 생산단계는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 지침서 제작 배부
 - 5년1주기로 모든 인삼재배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적용농약 확대 추진
 - 수확단계는 '04년부터 수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 · 장기적으로 GAP 및 이력추적제 도입
 - 유통단계는 미검사품 등에 대한 수거 · 폐기, 재검사, 압류 처분명령 및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제로 불법유통 근절
- 인삼 검사품에 대한 국내홍보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수 있는 검사마크 개발로 검사품 홍보
 - 검사마크에 대해 공모전으로 실시하여 상표등록 후 홍보
 -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좋은인삼고르기등 전국홍보 실시
 - 국내홍보비 : ('05) 100백만원 → ('08) 200 → ('10) 300

- 인삼계열화사업과 지역클러스터를 통한 집단화로 농가 소득 안정 및 가공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 재배이력 기재 의무화 및 농약검사 후 수매 등으로 인삼 생산·가공·유통을 일원화하는 계열화사업 추진
 - 장기적으로 수확면적의 40% 수준을 계약재배로 유도
 - 계약재배 : ('04~'06) 500ha → ('07~'09) 700 → ('10이후) 1,000
 - 지역클러스터 방식을 통한 청정생산특구를 조성하고, 국내내수 또는 인삼수출단지로 특화
 - 생산 : 30만평이상 규모화된 단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인삼생산
 - 가공 : APC에서 GMP기준에 의해 인삼류 가공제조
 - 유통 : 공동브랜드 유통 등

- 우리인삼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공세적인 시장개척으로 수출확대를 통한 산업활성화
 -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 활용 및 수출홍보비 지원 확대
 - 주요 수출국의 학계와 공동임상실험을 확대하고 실험결과를 현지 세미나개최 등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 연구비 지원 : ('04) 2억원 → ('07) 5 → ('10) 10 → ('13) 15
 - 홍보비 지원 : ('04) 6억원 → ('07) 10 → ('10) 15 → ('13) 20
 - '06년 세계인삼엑스포 개최로 인삼중주국 위상 제고(사업비 : 100억원)

-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제품 개발로 소비확대
 - 성인병예방, 다이어트, 피부미용 등 기능성제품과 인삼캡슐, 인삼초콜렛, 홍삼음료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특 작 : 정부지원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

<약용작물>

- 우수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기능성 제품 개발지원
- 약용작물 GAP조기보급, 생산이력제 도입 등 안전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외국농산물과 차별화
 - 도입계획 : ('04) 9개 품목 → ('05~'08) 45개 품목 확대
- 지역 Cluster와 연계하고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유통구조개선 및 국산한약재 우수성 홍보강화로 저질한약재유통방지

<버 섯>

- 우량(Virus free) 버섯종균 생산·유통을 중점 지원
 - 저온·멸균시설 등 종균배양시설에 대하여 종합자금 집중 지원
 - 유전자검정 법제화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종균 유통을 차단
- 버섯경영 합리화 및 유통활성화 대책추진
 - 버섯 종합배지 생산시스템 구축
 - 지역 Cluster 사업방식으로 지역버섯 밸리 조성
 - 자조금 조성 품목확대 및 해외수출촉진 홍보활동강화

<녹 차>

- 녹차재배기술, 신품종 육성, 제품개발 등 다양한 연구기능강화
-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신품종 수종갱신 및 지역녹차산업 Cluster
 - 신품종 대량증식기반 시설 및 연구운영 지원
 - 지역 Cluster 사업방식으로 녹차산업 지속생산기반구축
- 소비자에 부응하는 녹차품질안전관리 및 유통체계구축
 - 지리적 표시제, GAP, 생산이력제, 통합공동브랜드 조기추진

< 과 수 >

◇ 품질경쟁력과 검역제한이 있으나, 가격경쟁력은 낮은 품목군

- 광역화·전문화·계열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 공동브랜드 출하 촉진
 - 매출실적,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APC 회계독립 및 전문 경영체제 도입 등을 평가, 산지유통전문조직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 복수조합 연합출자, 민자유치 등을 통해 광역사업기반을 갖추거나 산지유통 개선실적이 높은 조직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APC 지원
 - 전처리시설, 비파괴 당도선별기, 형상 선별기, 예냉시설 등 수확 후 고품질 일관처리 시설 지원
 - 기존 산지 유통시설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에 참여할 경우 필수 시설 지원
 - 품목대표조직에 의한 『고품질과실브랜드』 유통 촉진
 - 1단계 : 품목별 전국대표조직의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 국산과실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 2단계 : 선도농가가 공동브랜드(예: Sunplus)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동 브랜드 지정 APC로 출하, APC가 고품질 유통 실현
 - * 김천 개령농협 포도 공동선별(공동브랜드명 : 곱내기포도)
 - 물량을 규모화하고 품질을 등급화하여 대형유통업체에 高價 출하
 - 농협에서 전문선별작업단을 운영하고 작업비 농가부담
- ⇒ 공동선별출하가격 12천원/5kg [일반출하(9천원)보다 33% 높은 가격 수취]

□ 선도농 중심 과원 현대화·규모화·생산비 절감 촉진

- 선도농가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시설을 지원, 전체 과수의 70% 이상을 고품질 현대화 시설로 생산
 - 과원수형개선, 우량묘목공급(M9 등), 재배환경개선 시설 등
- ※ 最上品 출하비율을 현재 30%에서 '13년 60%로 제고
- 고품질·저비용·내병성 보증묘 공급체계 구축
 - 종자산업법에 의한 우량 보증묘목의 생산을 지원, 기존 과원에 보급
- 쌀 중심 영농규모화사업을 사과·배 등 과수분야로 확대
 - 전업·은퇴농가와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장기임차)할 수 있도록 규모화 희망농가에게 장기저리자금 지원
- 집단화된 전문생산단지(30ha 이상)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정비
 - 용수시설, 배수로·경작로 등을 정비, 경쟁력있는 과수생산단지로 조성
- * 과원개선 사례(예산능금조합 조합원)
 - 조수입 : (개선전) 3천만원/2,000평 → (개선후) 13천만원/2,000평
 - 上等品率 2배(30%→70)×生産量 2배(2톤/10a→4톤) = 所得 4배 향상

□ 생산자조직 중심 품목별 기술 보급 촉진

-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품목별 기술협의회를 구성, 주요 품목별 육종·재배·수확후 관리·이용 등 4대 분야 기술 분류·체계화
- 품목별·기술단계별로 관련정보를 DB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 과잉기초에 있는 6대과실의 재배면적 감축 등 수급안정 추진

- 폐업과 경영이양지원을 통한 재배면적 감축으로 수급안정과 구조조정 도모
- 고품질 생산지원 등은 기존과원에 한하여 추진, 과잉축발 방지

IV. 중장기 정책 비전

< 2013년의 모습 >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고부가가치 상품화, 전략적 마케팅을 주도하는 공동마케팅조직 200개소가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착
 - 독립채산·전문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고 지역별·품목별 여건·소비지유통·식품업체 등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마케팅조직이 발전
 - 국제수준의 위생안전 및 공정설비를 갖추고 품목대표조직·지자체·민간식품·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화·현대화된 (계열)APC를 중심으로 주산지 상품화소요량의 50% 이상이 처리됨
 - 생산농가 및 소비자와의 거래계약 및 대금결제 전산처리가 보편화됨
 - 회원농가와의 생산-출하 브랜드협약하에 공동선별·예냉·전처리·포장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출하권 출자제가 정착
 - 대형유통업체, 대령수요처, 인터넷 홈쇼핑 등과의 안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됨
- 도매시장에서도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한 정가·정품·정포장 상품 상대매매가 보편화되고 대형유통업체, 식자업체, 급식업체 등 대량실수요처가 안정적인 고객으로 형성됨
 -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도매물류·선별·전처리 등 기능이 복합 다양화됨

- 농산물 파렛트 포장출하(50%)가 확대되는 등 물류체계가 효율화되고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 유통시스템이 실현됨
 - 하역기계화,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이 정착되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됨
 - 종합유통센터간 유통정보가 통합되어 총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주요 품목별로 자조금조직이 구축되어 농업관측, 계약재배, 생산·출하조정, 품질관리, 판매촉진 등 자율적 수급조절 수행
 - 품목대표조직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마련된 품질 및 안전성 관리지침이 준수되고 전국대표브랜드, 공동마케팅이 정착됨
-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안전성 관리체제 실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정착되고 토양·농용수 등 재배 환경·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생산이력제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됨
 - 지리적 표시 강화로 지역특산물 브랜드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가 강화됨
- 우수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식품·외식·급식산업이 성장
 - 공동대표브랜드 정착 및 식문화 해외홍보 등으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제고되고, 일본, 중국, 미국 등을 겨냥한 현지 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수출 50억불이 달성

< 중장기 정책추진 지표 >

구 분	2003년	2008년	2013년
1. 산지유통 규모화·전문화			
○ 산지 공동마케팅조직	-	100개	200
○ APC 처리비율 (10대 주요 원예품목 생산량 기준)	9%	20	50
2. 효율적 소비지 유통체계 구축			
○ 파렛트 출하율	14%	28	50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	54%	60	65
○ 화훼공영 도매시장 출하율	30%	40	60
○ 도매시장 건설 완료	30개소	32	32
○ 종합유통센터 건설 완료	13개소	16	16
3.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원산지표시 이행율	96%	97	98
○ 안전성 부적합율	1.5%	1.0	0.8
○ GAP, 이력추적관리제도 이행율 (과일·채소류 유통량 기준)	0%	3	10
4. 수급조절 및 경쟁력제고			
○ 자조금조성 품목단체	8품목	20	32
○ 채소수급안정사업 (생산량 대비 계약물량)	11%	18	23
○ 인삼계열화 (재배면적 대비 계약면적 비율)	-	19%	25 (수확면적 60)
○ 마늘 기계화율	20%	50	70
○ 배추일관기계화시스템 보급율	-	10%	20
○ 고품질 과수브랜드 유통활성화율	35%	76	100
○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율	45%	100	100
○ 과실 최상품 출하율	30%	40	60
5. 식품산업 육성			
○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180개	250	330
○ 전통식품 Codex규격제정	1품목	3	5
6. 농산물 수출확대			
○ 농산물수출액	18억불	30	50
○ 화훼수출단지수출비율	30%	40	60

제 3 장

축 산 분 야 대 책

I. 축산업 현황, 평가 및 전망

1. 한국 축산업의 위치

- 축산업생산액('03년 8.9조원)은 농림업생산액 중 27% 차지
 - '95년(5.9조원)에서 '03년까지 축산업생산액은 51% 증가
 - 양돈(91%), 오리·사슴 등 기타가축(158%) 등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낙농분야(38%)도 꾸준한 증가추세
 - 한우분야는 '97년 정점을 기록한 후 위축되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 양계는 1.3~1.6조원 수준에서 신장과 위축 반복
 -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
 - ①쌀 ②돼지 ③한우 ④우유 ⑤건고추 ⑥계란 ⑦딸기 ⑧배추 ⑨닭 ⑩딸기
- 축산농가는 '90년대 중반이후 수입개방,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전업화가 진전되고 젊은 경영주가 많음
 - 축산농가수(4대축종, 비중):('90)947천호(54.6%)→('95)792천호(52.8)→('00)545(39.4)
 - 40대 이하 축산경영주 비율이 28.8%(전체농가 평균 9.7%), 60대 이상 경영주 비율은 26.7%(전체농가 평균 51.0%)
-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 1인당 육류 소비량 : ('90) 19.9kg → ('97) 29.3 → ('03) 33.3
 - * EU국가 87kg, 미국 72, 호주 66, 중국 36, 일본 34 ('01년 기준)
 - 1인당 우유·유제품 소비량 : ('90) 42.8kg → ('97) 52.1 → ('03) 62.4
 - * 시유는 최근 감소추세, 치즈·버터·발효유 등 가공품은 증가 추세
- UR타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육류 자급률은 하락 추세
 - 생산량('95→'03) : 쇠고기 155천톤→141, 돼지고기 625→776
 - 자급률('95→'03) : 쇠고기 51.3%→ 36.3, 돼지고기 94.5%→92.8%

2. 그간 축산정책 추진 실적

- 그간 UR타결과 WTO체제 출범 이후의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규모화, 시설 현대화, 품질고급화 등에 중점 지원
 - '92년부터 '02년까지 총 6조 5,441억원 투융자
 - 분야별로는 기반시설 분야에 3조 6,792억원(56%), 경영개선에 13,558억원(21%), 품질안전 6,617억원(10%), 유통개선 5,945(9%), 축산가공 2,529억원(4%)
- 그 결과 전업화 촉진,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확대, 방역체계 조직화 등 성과 거양
 - 한우, 양돈, 양계, 젓소 전 축종에서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

〈축종별 전업농 현황('95 → '03.12)〉

축종	전업농 농가수(비중)	전업농 사육규모(비중)
한육우	2,458호(0.5%) ⇨ 5,040(2.7)	206천두(8%) ⇨ 490(33.1)
젓소	1,325호(5.6%) ⇨ 4,539(43.2)	98천두(17.7%) ⇨ 343(66.1)
돼지	1,113호(2.4%) ⇨ 2,928(19.2)	2,360천두(36.5%) ⇨ 6,706(72.6)
산란계	357호(12.5%) ⇨ 424(22.2)	23,515천수(50.8%) ⇨ 29,883(61.8)
육계	306호(12.0%) ⇨ 743(46.2)	12,518천수(37.8%) ⇨ 35,164(78.5)

* 전업농 : 한우·젓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이상

- 축사시설 현대화, LPC 건설(9개소) 등 H/W위주 집중투자
- 가축개량, 등급관정을 통한 시장차별성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 확대
 - 쇠고기1등급/돼지고기A등급 출현율 : ('95) 12.8/6.3% → ('03) 33.3/40.4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 등 위생·안전성 제고 기반 확충
 - HACCP 적용 도축장 : ('00) 10개소 → ('04.6월 현재) 118
- 친환경 축산직불제('04), 축산업등록제('02) 등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

3. 여건 변화 및 향후 과제

□ DDA협상, FTA 확대 등으로 축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

○ 축산물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시장경쟁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며, 특히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영향이 클 전망

* '04년 관세율 : 쇠고기 40%, 냉동돈육 25, 냉동계육 20, 혼합분유 36, 전지·탈지 분유 176, 천연꿀 243

□ 대내적으로는 축산물 안전성, 환경, 가축방역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KREI 추정 1인당 육류소비량 : '03년 33.3kg/인 → '13년 39.2)

○ 소비자들은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 품질 및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

○ '00년 이후 교역 증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가축질병 빈발
- 구제역('00년, '02년 발생) 4,400억원 피해, 가금인플루엔자('03년) 1,500억원 피해, 돼지콜레라 ('02년 재발) 518억원 피해

○ 축산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추세이나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연간 발생량('03년 기준) : 49,830천톤(1일 137천톤)

* 축종별 구성비 : 한우 15.8%, 젓소 17.3, 돼지 58.1, 닭 8.7

* 돼지분뇨 발생량 추이 : ('92) 17백만톤 → ('97) 22 → ('03) 29

○ EU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중시하여 이를 국제규범화, 교역조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

◇ 여건변화에 맞춰 우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차별성 및 안전성 제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체질 구축, 사전예방적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등이 과제

Ⅱ. 2013년 축산업의 비전

생산·소득 전망

- 축산업의 규모화가 계속되어 '13년에는 축산전업농 2만호가 사육의 85%를 담당할 전망 ('02년 13천호, 65%)
 - 축산전업농의 평균소득은 규모화·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02년 87백만원에서 '13년 108백만원으로 증가

< 한 우 >

- 전업농 9천호가 사육의 70%를 담당
 - 송아지번식율은 77.6%에서 83%로, 평균체중은 593kg에서 610kg으로 늘어나고, 쇠고기 1등급 출현율은 60%까지 확대('02년 35.2%)
 -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117백만원에서 '13년 154백만원으로 증가

< 돼 지 >

- 전업농 4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
 - 이유두수는 20두에서 23두로 늘리고, 돼지 A등급 이상 출현율을 '13년 70%까지 확대('02년 38.8%)
 -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100백만원에서 '13년 113백만원으로 증가

< 닭 >

- 전업농 2천호가 사육의 85%를 담당
 - 닭고기 수출물량을 19천톤에서 60천톤으로 확대하고, 산란계의 산란율은 75.1%에서 78%로 증가
 - 전업농 평균소득은 육계는 67백만원에서 81백만원으로, 산란계는 68백만원에서 96백만원으로 증가

< 쫄 소 >

- 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
 - 두당 산유량은 7,071kg에서 8,000kg로 증가하고, 원유 체세포 1등급 비율은 50%까지 증가('02년 23.4%)
 -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81백만원에서 '13년 97백만원으로 증가

유통 구조

- LPC가 중심이 되어 계열화 및 부분육·포장육 유통이 진전
 - LPC 도축물량 : ('03) 소 8%, 돼지 16% → ('13) 25/30
 - 계열화 : 돼지 ('02) 11% → ('13) 30, 육계 ('02) 70% → ('13) 85
 - 부분육·포장육 유통비율
 - ('02) 쇠고기 18%, 돼지고기 30%, 닭고기 15% → ('13) 40/50/80%
- 고품질·고부가가치 축산물 중심으로 지역브랜드화가 촉진
 - 한우 : 우수 브랜드가 전체 물량의 50% 수준을 차지
 - 돼지 : 현재 52% 수준인 브랜드육이 전체의 70%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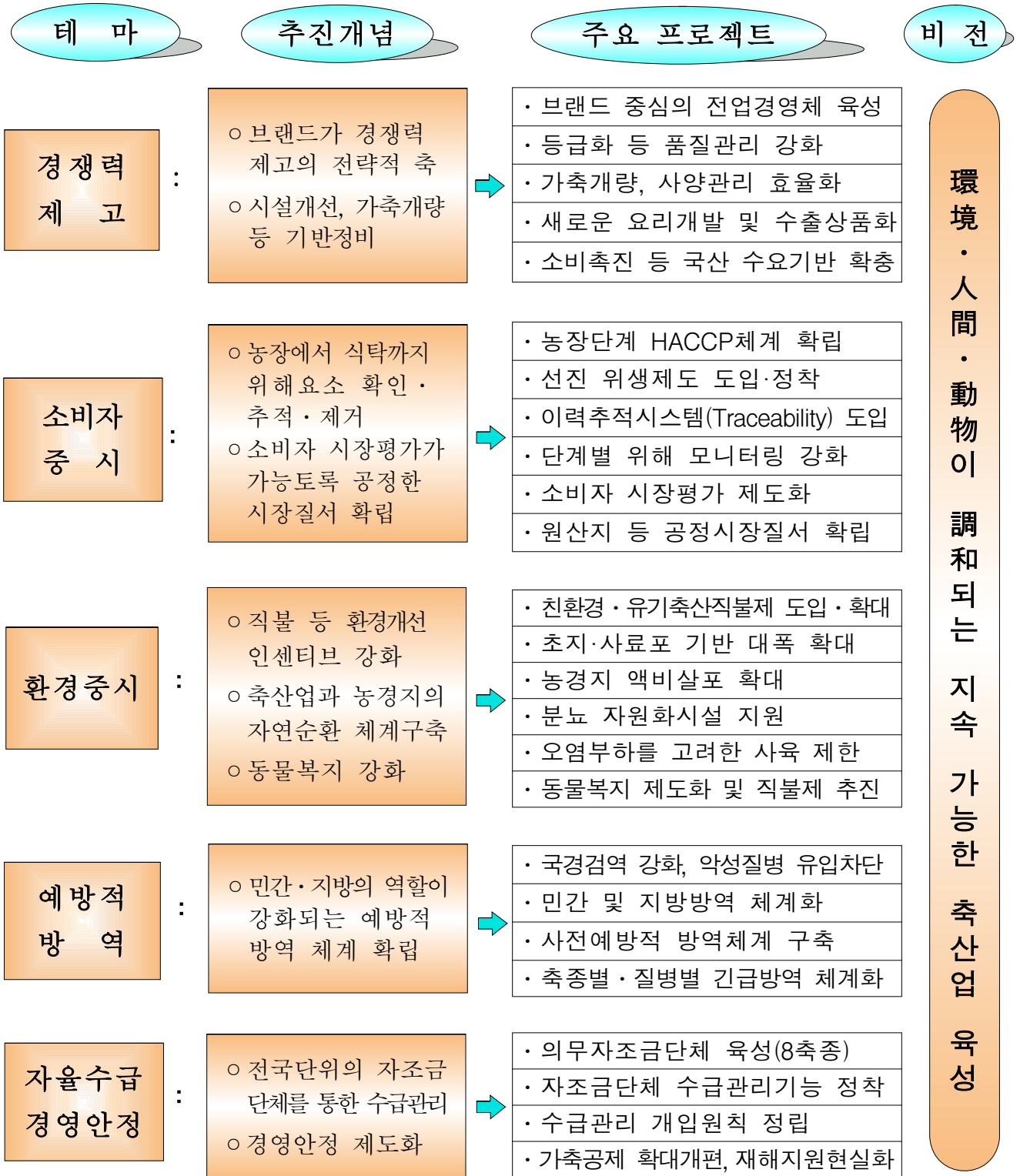
친환경 축산

-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등으로 환경 친화형 축산으로 전환
 - 직불제를 통한 가축의 친환경 사육 비중을 축종별 사육의 20% 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도 전체의 1%까지 생산

Ⅲ.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 종합자금 및 컨설팅을 브랜드 전업경영체에 중점 지원
 -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체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농장 및 사료공장에 HACCP 도입
 - 도축·가공장에 HACCP를 정착, 축산물 유통단계에도 HACCP 도입
 - 농가·가공장·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및 위생검사 확대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
 - 친환경직불, 분뇨자원화, 사료영양관리 등 자연순환체제 구축
 - 유기축산, 조방축산, 동물복지 등 축산 선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
-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제 구축
 -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
 - 농가 교육강화와 방역관련 규정의 엄격 적용으로 방역인식 제고
 - 지방 방역인력 확충과 민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방역 활성화
-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화
 - 축종별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체계 정착
 - 가축공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

축산정책 목표 및 수단



- ◆ 정부 : 환경, 안전성, 브랜드, 차별화 등 경쟁요소를 중심으로 지원
- ◆ 농가 : 자율과 창의로 시장기능에 따라 자기혁신에 의해 생산성 향상

IV. 주요 추진대책

1. 고품질 우량브랜드 증점 육성 및 경쟁력 제고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3.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4.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방역체계 구축
5. 소비자 지향적 선진유통체계 구축
6.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경영 안정

1.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경쟁력 제고

(1)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조직

○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판매관련 브랜드규약 제정

- 브랜드규약을 통해 브랜드 품질·안전성·기능성 등을 사전 검증

○ 지자체는 지역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경영 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품질균일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브랜드경영체는 종합자금 방식으로 생산·유통자금을 우선 지원

- 브랜드관리 전산시스템, 포장재, 컨설팅 자금 등

- 산지 생산·유통지원사업 자금은 브랜드 추진 조합에 우선 지원

□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체계 구축

○ 농협중앙회 브랜드컨설팅 기능 강화 및 전문 컨설팅업체 육성

- 컨설팅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에 컨설팅자금 지원

○ 우수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경영지침 개발·보급

□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계 구축

- 대형유통업체와 정례협의회를 통해 판로개척 지원
- 브랜드육 우수판매업체에 시상 및 브랜드육 구매자금 지원
- 브랜드활성화 심포지엄, 지역별 토론회개최로 분위기 확산
- 브랜드화의 장점 및 성공사례 소개, 우수브랜드 발전방안 토의 등
- 규모화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 추진

□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 소비자단체에서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 마련, 인증경영체 선정 등 추진
- 브랜드의 일반적 요건 이외에 적정 분뇨처리 여부, 질병발생 상황, 잔류물질·미생물 위반여부 등도 인증기준에 반영
- 매년 인증 실시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우수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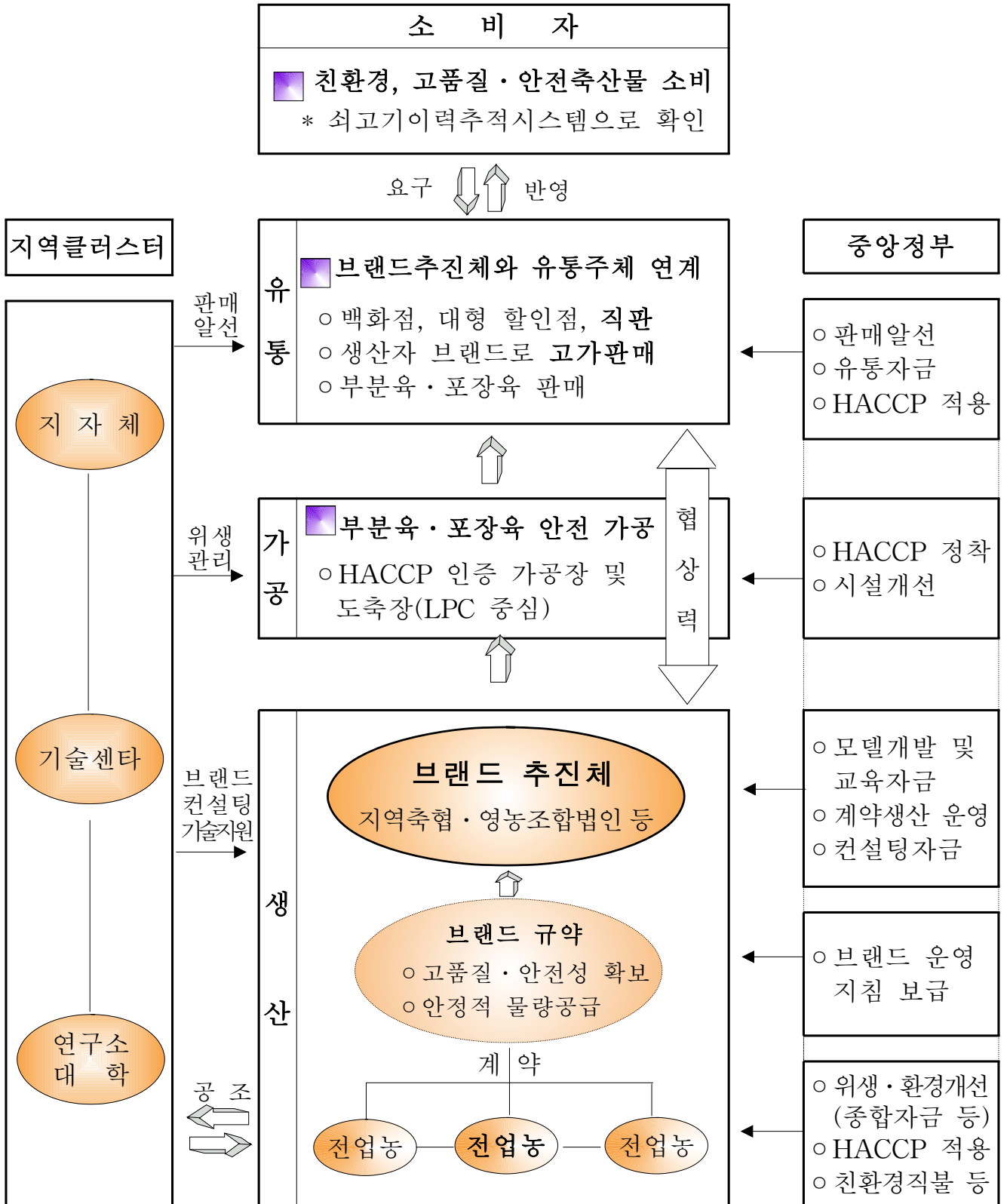
- 브랜드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브랜드 정부 시상
- 인증브랜드, 경진대회 시상브랜드 등 고품질 브랜드에 대해 TV 등 대중매체 이용한 집중홍보 실시

● 우량 브랜드 육성은 주요 축산과제 달성의 ‘전략적 축’

- ☞ 브랜드를 통해 고품질, 위생·안전성, 적정 분뇨처리·약취제거 등 친환경 축산, 질병방역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

<브랜드 육성 체계>

브랜드 : 친환경, 위생·안전성, 고품질 등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



(2) 축종별 경쟁력 제고

<기본방향 >

한 우

- ◇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고품질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 이력추적시스템 등 신뢰확보로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돼 지

- ◇ 브랜드 중심의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업 육성
- ◇ 비선호부위 소비촉진 홍보로 돼지고기 균형된 소비 유도

닭

- ◇ 계열화업체 중심의 브랜드 닭고기 고품질화 추진
- ◇ 종계장·부화장 질병예방 강화로 생산성 향상

젖 소

- ◇ 집유 및 가격결정체제 개편, 소비 홍보 등으로 우유 수급을 안정
- ◇ 구분집유, 가격 차등화 등을 통한 원유 품질 향상

< 한 우 >

- ◇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 종축·사료·사양 관리를 통일하여 품질 개선
- ◇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해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 지역축협 등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조직

-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판매관련 브랜드규약 제정
 - * 최소규모 : 한우는 4천두(1일 2두 출하), 양돈은 50천두(1일 300두 출하) 이상
- 브랜드 한우 비율을 현재 17.4%에서 '13년까지 50%까지 확대
- 브랜드경영체에 종합자금방식으로 생산·유통자금 우선 지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개량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 총체벼 생산 추진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한우검정사업을 통해 24개월령 체중을 610kg까지 확대(현재593)

□ 국가 가축개량체계 효율화 및 분산된 가축개량 업무 조정

- 가축개량사업소의 경영효율화로 전문성, 정액공급서비스 개선
- 축산기술연구소, 농협, 관련협회 등에 분산된 종축등록 및 검정업무를 축종별로 일관 통합·조정

□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여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 둔갑판매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한우고기 우수성 및 비선호부위 소비촉진 방안 연구

< 돼 지 >

- ◇ 우량브랜드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업 육성
- ◇ 자조금을 통한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자율적 수급조절

-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의 중점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기존 유망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물량을 70%까지 확대
 - 브랜드주체가 농가에 사양관리 전산지도, 사료통일 등 교육 강화
 - 브랜드 경진대회 및 우수브랜드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적정 분뇨처리,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양돈시스템 구축
 -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연계한 분뇨처리 적정화 및 악취 제거
 - 퇴비·액비 차손보전, 액비화 기술개발 및 사료영양관리 강화
- 돼지고기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 가축개량, 후기배합사료 급여 등 사육단계에서 품질을 개선
 - * A·B등급 출현율(63.5% → 80), 이유자돈수(20두 → 23)
 - 육질중심의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및 예냉·급냉시설 확충
 - 제주도 등 지역청정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및 부위별로 균형 소비 유도
 - 의무자조금 정착을 통해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 정착
 -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비선호부위 수요 집중 개발
 - 요리 컨테스트 매년 개최, 국밥 등 새로운 요리개발 및 홍보

< 닭 >

- ◇ 계열화된 닭고기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품질경쟁력 제고
- ◇ 양계장·종계장·부화장 등에 대한 질병 방역체제 확립

- 계열화업체 중심으로 닭고기 브랜드 고품질화 및 수출 확대
 - 포장화 촉진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및 식중독균 오염 방지
 - 닭고기 등급판정을 확대하고 등급제에 대한 홍보 강화
 - 수출용 대형닭 생산체제 구축으로 수출기반 확대
-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 조성
 - 추백리·가금티프스 정기검진 강화로 종계장·부화장 청정화
 - 감염닭의 살처분 보상 및 도태 장려금 지급 추진
 - 뉴캐슬병 예방약 무료 공급, 미접종농가 처분 및 차단방역 강화
 - 닭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교육 및 홍보 강화
- 수급안정 및 가축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자조단체 중심의 원종계·종계 관리를 통한 수급조절 효율화
 - 종계능력 검정,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우량병아리 보급 확대, 사료효율 개선 등 생산비 절감
- 계란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을 통한 산란계 농가 소득 안정
 - 계란 등급제 확대 실시 및 냉장유통 보급 확대 등 품질 향상
 - 자조금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 장치 강화

< 젓 소 >

- ◇ 생산·유통·소비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 도모
- ◇ 젓소 사육환경 및 원유의 품질·위생 개선

- 집유 및 원유가격 결정체제를 개편하여 수급안정 도모
 -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
 - 원유가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결정토록 개편 추진
- 우유 소비 홍보,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
 - TV매체를 통한 홍보, 우유의 우수성 교과서 반영, 자조금 활성화 등으로 어릴 때부터 우유먹는 습관을 형성 및 시유 소비기반 확대
 -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로 시유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제품으로 확대
- 원유의 품질·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용도별 구분집유를 통해 가공용과 시유용 품질·가격 차등화 정착
 - 농가단위로 구분집유하여 상위등급은 시유로, 하위등급은 유제품으로 생산
 -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장 위생·환경 개선
- 젓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산유능력검정 등 젓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 연장
 -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채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오 리 >

- 종오리 검정 등 개량 지원 확대로 오리 생산성 향상
- 계열화를 통한 오리고기 브랜드 촉진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도축·가공시설 지원으로 오리고기의 위생수준 향상
- 자조금 조성으로 종오리 감축 등 수급안정 및 소비확대 추진
- 종오리 등록제 추진을 통한 오리수급안정 유도

< 꿀 벌 >

- 다양한 밀원 식물조성 및 관리강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종봉개량을 통한 우량벌 보급으로 꿀벌의 생산성 향상
- 국산 벌꿀의 원산지표시·품질인증 강화로 시장 차별화
- 꿀벌응애 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 사 슴 >

- 사슴 개량 및 우수종류 인공수정 확대로 생산성 향상
- 고품질 녹용생산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녹용안정판매 기반 조성
- 녹용원산지 단속강화 및 등급판정기준 개발
- 자조금 조성으로 소비 홍보 강화 및 소비 기반 확보

< 경 주 마 >

- 국산 경주마의 능력 향상을 위한 종빈마 도입 지원 확대
- 馬일본뇌염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로 건강한 마필 생산
- 경주마를 이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육단계 : HACCP 도입, 동물약품·사료관리 강화

- 축종별 농장단계 HACCP 지침 마련, '06년부터 시범 도입
- 동물약품 안전사용지침 위반농가 처벌 등 위생규제 강화
 - 잔류검사 및 과태료 등 제재 강화로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유도
 - 후기사료 급여 의무화, 인센티브 부여 등 사료 관리 강화
 - 동물약품 투여 및 후기사료급여 관련 농가 교육 강화
- 사료내 혼합가능한 농약·동물약품종류 감축(53→25종 내외), 사료공장 HACCP 도입으로 살모넬라 등 사료안전성 및 품질 향상 유도
 -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수준 확대(8개→10개 이상)
 - 유전자변형사료(GMO) 동물 위해성 평가지침 제정 운용
 - 사료공장 HACCP 기준을 마련하고 '06년부터 사료공장에 적용

□ 도축·가공단계 : 도축검사 강화, HACCP 등 선진제도 정착

- 도축 검사관·검사보조원 확충, 운영 개선 등 검사 내실화
 - 검사인력 확충으로 도축라인 위생검사 및 HACCP 점검 강화
- HACCP 적용도축장에 미생물(살모넬라, 대장균) 검사기준 적용
- 도축장·가공장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강화 및 결과 공표
-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 시행을 통한 지원차별화
- 축산물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및 의무화 추진
 - HACCP 적용품목 확대(현 13품목), 적용시 시설자금 우선 지원
- HACCP 적용 축산물의 차별화 및 소비 확대 유도

□ 유통단계 : 시중 유통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 정착

○ SSOP(자체위생관리기준) 의무화 및 HACCP 도입 추진

- 보관·운반·판매장에 대해 SSOP 의무화 추진('05년)
- HACCP 모델 개발 보급 및 적용 작업장 단계적 확대('04부터)
-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자금 우선 지원

○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및 자발적 회수제도 정착

- 유통단계별 미생물 오염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환류
- 수입축산물 판매업 신고제도 강화(시·도지사 → 검역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 의무 부과

○ 육류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도입('08년 제도정비) 및

닭·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유통 의무화 추진

□ 판매단계 : 식육처리기능사, 위생감시원제 도입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업소 신규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도입('07년)

- 기존 영업자는 영업 계속 허용(사례 :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

*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식육판매점 허가제 운영, 자격증 소지자만 영업

○ 위생감시원제 도입으로 영업장 등 판매단계 위생관리 강화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추진(보건복지부와 협조)

○ 축산식품 안전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소비자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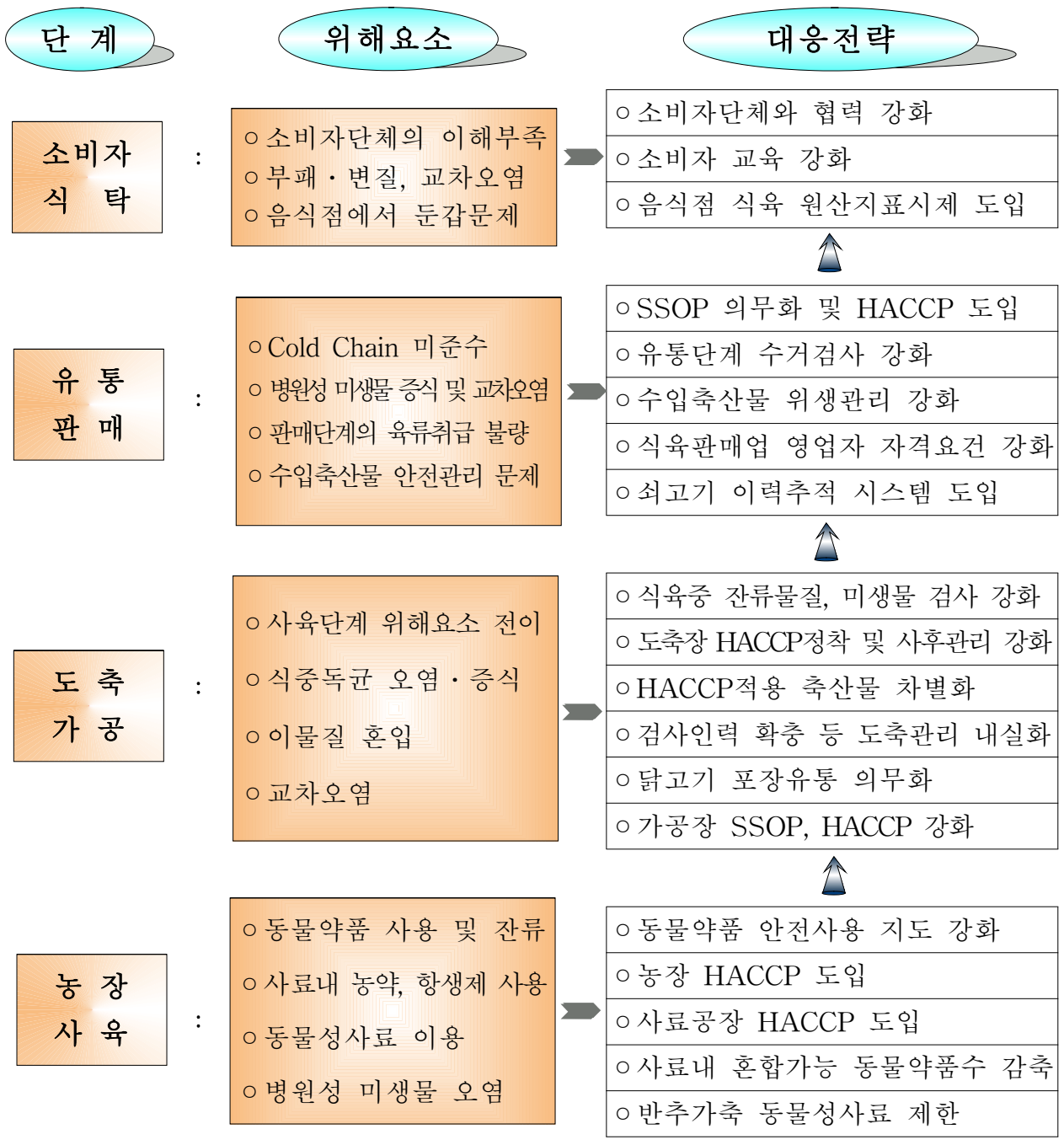
□ 신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허용기준 신설·개선 등 관리 강화

○ 병원성미생물, 신종 유해물질 등 신속검사법 개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

농장(Farm)에서 식탁(Table)까지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 · 일원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 교육홍보를 통한 의식전환 유도과 위반자 처벌을 병행 «
 » 우수브랜드를 안전관리의 축으로 활용 및 위생기준 개선 «

3.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축산업등록제 등 정착·활성화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 일부 지원
 - * 소 : 초지·사료포 확보 등 조사료 자원확보 및 토양 환원
 - * 돼지·닭 : 사육밀도 완화,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자원화
 - * 공통 : 분뇨처리 경로 확인,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등
-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05년말까지), 환경부하 저감뿐만 아니라 가축방역 효율화,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에 기여
 -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
 - * 네덜란드는 농가별 분뇨발생 허용량 제한, 벨기에는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제정, 프랑스는 대규모 농장허가제 운영

□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 등 환경부하를 경감

- 사료영양관리를 통한 질소, 인, 악취 등 절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사료공정규격 개정 및 친환경축산직불 프로그램에 반영 추진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07년) 및 적정 사육두수 유도
- 지역별 양분총량제 시행 후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 지속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11년)
- 적정사육 두수 및 시설면적 설정으로 밀식사육 억제

□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체계 구축

- 경종·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연순환 촉진
 - 퇴비 판매가격 차손보전 확대 및 액비 차손보전 추진
 -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 및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원 확대

- 축산분뇨 대량수요처 확보 및 액비화 등 기술개발 촉진
 - 간척지 등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지를 조성하여 액비 수요처 확보
 - 다양한 농축액비 개발, 기능성 퇴비·액비 유통제도 개선 등 기반 확충
- 축산분뇨의 악취발생 최소화 기술 개발 및 악취규제 강화
- 경지면적에 비해 축산분뇨 발생량이 과도한 지역 특별관리
 - 과밀 시·군 집중 관리 및 정책자금 지원 패널티 적용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경종 연계 강화

-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확대
 - 지역여건에 적합한 종자·비료(퇴비) 지원 및 기술지도
 - 생산조정, 휴경지 등을 이용하여 사료작물 재배지 최대 확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확대 및 총체벼 생산 추진
 - 추진계획 : ('03) 859ha → ('08) 3,500 → ('13) 5,000
 - 농·축협 등 조사료 연결체를 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연결체에 조사료 수확·운반 장비 등 지원
- * 연결체가 경종·축산농가와 총체보리·벼 재배·공급계약 체결,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 운반까지 책임

□ 유기축산업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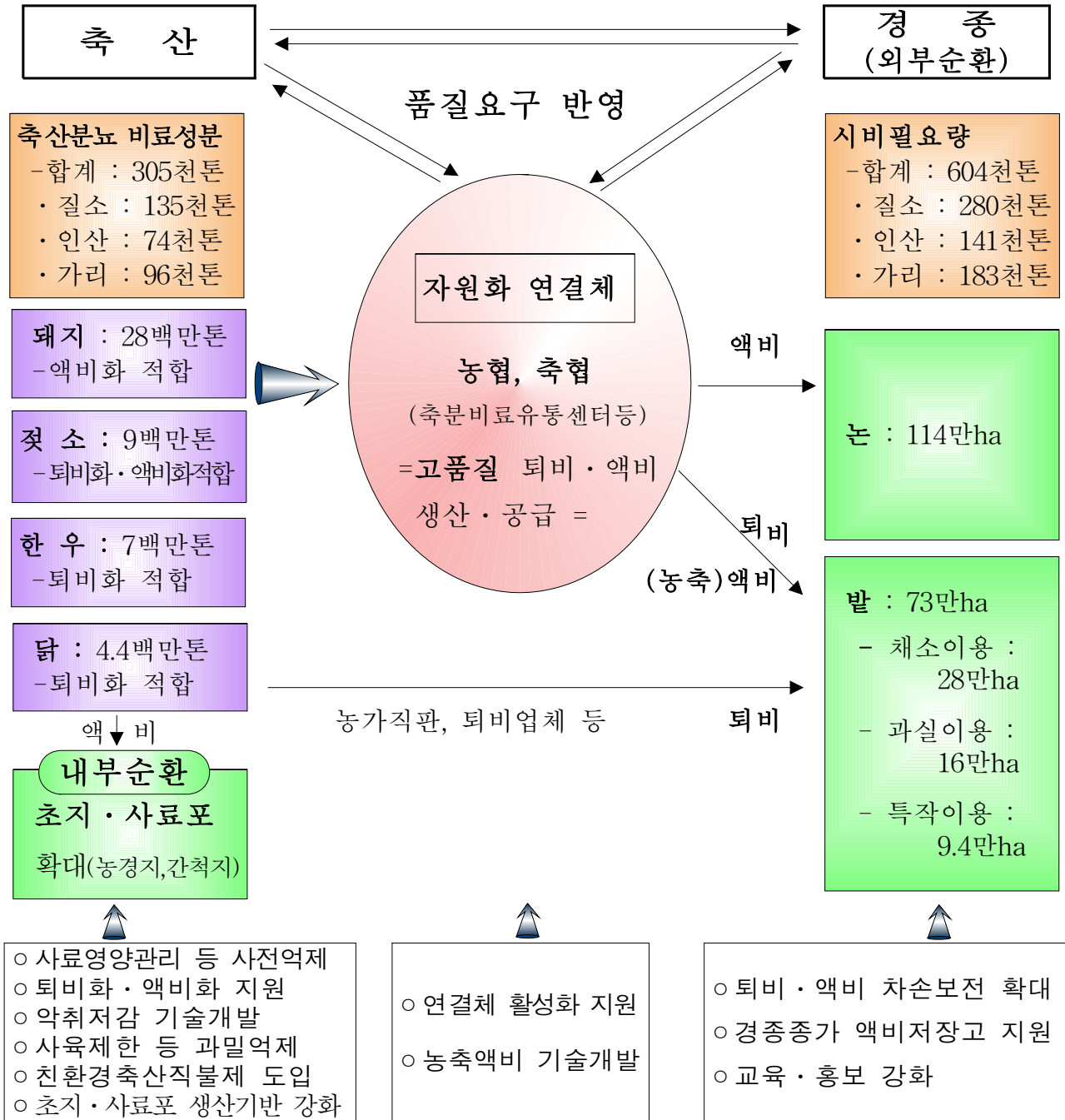
- '03~'05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유기축산 모델 개발
 - 생산기술·지침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국내 유기조사료 및 배합사료 생산기반 구축 유도

□ 동물복지 고려하는 가축 사육환경 조성 추진

- 가축사육·수송·도축·살처분 등 관련 동물복지 규정 마련
- 가축사육시 일정한 복지기준 준수시 보상 지불제 도입
- 동물복지 기준 충족 농장 및 축산물에 대한 복지인증제 도입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체계

◆ 축산분뇨 특성과 수요자 요구를 일치시켜 축산 내부 순환 및 경종과의 외부순환 활성화
 ⇒ 자원화 연결체(축협, 농협)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농진청 · 지자체 · 연결체가 중심이 되는 국가 · 지역단위 통합양분 관리체계(INM) 구축 본격화 «

4.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 ◇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 발생국 수입금지정책 유지 등 유입차단
- ◇ 구제역 : 국경검역·소독 등 강화로 재발방지 최대한 노력
- ◇ 돼지콜레라 : 예방접종 강화·지속실시로 근절여건 조성
- ◇ 뉴캐슬·부루세라병 등 : 예방접종으로 발생 최소화

□ 국경검역 활동 강화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

- 악성 가축전염병 위험지역 운항노선·출입국자 집중 관리
 -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 검역탐지견·발판소독조 운영 강화
- EU등 외국 동향을 파악, 검사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

□ 농가교육·혈청검사 확대 등 사전예방적 방역체제 구축

- 농가 방역교육 및 방역규정 위반농가 규제강화로 방역인식 제고
 - 검사·예방주사 등 방역비용 농가 부담으로 농가 방역책임 강화
- 농장소독·예방접종·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 이행 확인 강화 및 위반농가 법적 처분 철저
 - 과태료 상향조정 (300→500만원이하), 살처분 보상 차등지원 등
- 혈청검사 및 예찰 강화로 질병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 종돈장·종계장·부화장, 양축농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진 강화
 -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 우수농장 공표 등
 -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운영 활성화
- 폐사 가축 처리 철저 및 남은 음식물 가축급여 농가 특별 관리
-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제의 단계적 적용
 - 비발생인증 : ('05년) 농장단위 → ('07년) 시·군

□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

- 질병별 SOP에 의해 발생지 지자체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
 - 환경·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살처분 범위 최소화 및 이동통제
- 주요 질병 발생농가는 과태료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사육제한 등 처벌 강화
- 방역소홀 지자체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강화로 참여 확산
 - 예방접종률 저조 등 방역 부진 지자체를 대외에 공포
 - 정기평가 실시에 따른 방역비 등 축산사업비 차등 지원 등
 - 해당지역 농가·축산시설 집중관리로 방역규정 위반 감시 강화

□ 중앙·지자체·방역본부·농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 중앙 및 일선 방역 조직 및 인력 확충
 - 농림부 및 검역원 등 중앙방역조직 개편 및 기능 확충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의 방역 전문인력 확충
 - 공익수의관제, 도축검사보조원제 도입으로 현장 전문인력 보충
 - * 수의사가 일정기간 가축방역기관에 근무시 병역의무를 대체

- 방역예산 지방비 부담비율 확대로 지자체 방역인식 제고
- 방역본부의 인력·예산을 확충, 민간방역 기능 활성화
- 시·군단위의 관련기관간 방역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 요구에 대비한 사전대응체제 구축

- 동물 및 축산물 교역시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절차 및 기준 마련
 - 검역원 작업팀 운영 및 수입위험분석 모델 개발(‘04년 연구용역 과제)

<참 고>

< 가축질병 발생 · 방역 현황 >

- 구제역 : '02. 16건 발생 → 신속한 살처분으로 청정국 지위 회복(11.29)
 - 살처분 보상, 수매, 피해농가 지원 등에 총 1,434억원 투입
- 조류인플루엔자 : '03.12~'04.3 충북음성 등 10개 시군 19건 발생
 - 살처분 보상, 가축 재입식 등을 농가경영안정 등에 1,531억원을 지원
- 돼지콜레라 : '03.3~10월 전북익산 등 26개 시·군에서 총 70건 발생
 - 전국적인 동시발생 양상을 감안 예방접종 실시(22백만두), 살처분(98천두) 등에 304억원 지원
- 닭뉴캐슬병 : 매년 전국적으로 40~80여 건씩 발생
 - 예방약 공급(10억수분, 40억원/년), 혈청검사 지원 등 방역추진
- 광우병(BSE) : 유럽국가에서 일본('01), 이스라엘('02) 및 캐나다, 미국('03)로 확산(24개국 발생)
 - 발생국(24) 및 인접국(10) 등의 관련 물품(680개) 수입 금지
 - 반추동물 육골분과 음식물 급여금지('01.3)
- 소부루세라 : 검진확대로 그간 숨겨져 있던 감염소 색출 증가
 - ('00) 271건/1,249두 → ('02) 110/845 → ('03.10) 150/938 → ('04.10) 340/3,157
- 소결핵 :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 발생
 - ('00) 185건/532두 → ('02) 259/1,227 → ('03.10) 204/738 → ('04.10) 108/501
- 돼지오제스키병 : 증상이 뚜렷치 않아 조기발견에 어려움
 - ('00) 221건/7,162두 → ('02) 50/1,792 → ('03) 30/355 → ('04.10) 35/835
- 광견병 : 주로 휴전선 주위 야생너구리를 통해 발생
 - ('00) 24건 → ('02) 78 → ('03.10) 16

5. 소비자 지향적 선진 유통체계 구축

□ 브랜드육, 포장육, 냉장육, 부분육 중심으로 유통체계로 개편

○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연결 시스템 구축

- 소 : 생산자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화
- 돼지·닭 : 생산 또는 유통브랜드를 통한 고품질화 및 일관생산체계 구축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평가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도축장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

□ 등급판정 확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 닭고기·계란 등급판정을 확대하고 소 도체등급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고급화 유도

○ 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 활성화 및 돼지고기에도 단계적 도입

○ 돼지는 육량 위주 판정에서 육질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 개정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 확대 등 제도 개선

□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정착 및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식육의 종류·원산지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하는 식육거래 기록의무제 정착

○ 소비자가 육류의 이력(출하자, 사육지, 도축일,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 도입

- 쇠고기 우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수입 축산물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

○ 유전자(DNA) 감별법 적용 확대, 음식점원산지 표시 도입, 명예감시원 확대, 특별단속 등 원산지 단속 강화

6.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경영 안정

- 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소비홍보 및 자율 수급관리 체계 정착
 - 현재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소비홍보 및 민간자율 수급조절 본격 추진
 - 자조금 사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오리 등으로 확대 추진
 - 자조금단체가 해당 축산물 소비촉진, 정보교환, 품질관리 등 이외에도 사전·사후적 수급관리기능을 수행
 - * 정부는 전염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개입
 - 자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대의원의 총수, 수납기관의 수수료 조정 등
- 전업화에 따른 경영위험의 사전예방 및 경영희생 지원
 - 전업농의 경영위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 및 농가 회계교육, 위험관리 등 지원
 - 경영장부 기록 유지·관리 농가에 정책자금 등 우대 조치
 - 농가 경영평가를 통한 선별적 희생지원(work-out방식)
 - 부실경영체는 퇴출하고 희생 가능한 경영체를 중점 지원
- 자연재해, 사고 등 위험관리 강화로 양축농가 경영 안정
 - 가축공제사업 대폭 확대·개편
 - 가입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확대
 - 질병발생시 경영손실보상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농가경영 안정화
 - 민간보험사 참여 유도로 공제료 인하와 보장수준 확대 유도
 - 가축입식비, 축사복구비 등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 < 외국의 자조금 이용, 소비촉진 제도 사례 > —

◆ 다수 국가가 소비촉진, 시장개척, 연구, 농가교육 및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유통·가공업자 등에 자조금 부과 ◆

⇒ 자조단체 구성·운영, 징수대상 및 방법은 나라마다 상이하나, 자조단체의 대표성, 자조금 의무화(무임승차 해소)는 공통 요인

□ 미국 : 직접선거로 자조금 조성, 축종별 자조위원회 운영

- 쇠고기(쇠고기판촉운영위원회), 돼지고기(국립양돈위원회) 등 구성
- 자조금 : 소 1\$/두, 돼지판매가의 0.45% 등(별도정부지원 없음)

* 정부는 투표관리, 사업승인 및 업무를 감독

□ 영국 : 도축·수출시 부과금(Levies) 의무 징수

- 육류·가축위원회('67. 설립)가 총괄운영(기능위원회, 지역위원회)
- 자조금 : 소 3.5£, 양 0.5£, 돼지 0.85£(별도정부지원 없음)

□ 프랑스 : 농수산물농촌부 산하 공공기관인 품목별 개입조직 설립(육류, 우유 등 14개 사무소 설립)(농촌법전)

- 국립직능사무소(Office)가 시장개척, 정보제공, 품질관리 등 수행
-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부담(우리의 공사조직과 유사)

□ 스위스 : 생산자와 정부가 공동부담 기금방식('01 연방농업법)

- 대표성(농산물 절반이상, 경영자 60%이상 등) 있는 생산자, 직능단체에 거출금 징수권한 부여(스위스농민연맹, 우유생산자연합 등)
- 단체 대표자회의 2/3이상 찬성으로 의무적 자조사업 신청 가능

□ 캐나다 : '02 농가농산물관리법 제정, 「캐나다 쇠고기 판촉원」 설립

- 생산자와 수입업자에 소 두당 1\$ 일률 부과(별도정부지원 없음)
- 캐나다 소 생산자협회가 국내농가 부과금 징수 후 원에 납부

제 4 장

산림 · 임업분야대책

I. 산림 · 임업의 현실과 과제

1. 산림 · 임업현황

- 우리나라의 산림은 641만ha로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
 - 국유림은 145만ha(22%)으로 국가 집약적 경영 · 관리 미흡
 - 미국 34%, 일본 31%, 영국 55%, 인도네시아 95%
 - 녹화(綠化)는 되었으나 자원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
 - ha당 임목축적이 70m³으로 선진국의 절반 이하
 - 나무의 나이는 30년 이하가 68%로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

구 분	면 적		축 적		ha당 축적
계	6,412천ha	100%	448백만 m ³	100%	70m ³
국 유 림	1,448	22	136	30	94
공 유 림	491	8	34	8	70
사 유 림	4,473	70	278	62	62

* 산림 선진국의 ha당 축적(m³) : 일본 145, 독일 268, 스위스 337
 연도별 ha당 축적(m³) : ('10) 43 → ('52) 6 → ('80) 22 → ('90) 38

- 산림소유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제적 임업경영에 제약
 - 산림소유자는 217만 명이나 10ha 미만이 대부분(평균 2.1ha)
 - 독립가 · 임업후계자 등 전문(전업) 임업인은 1,465명에 불과

계	10ha 미만	10~50ha 미만	50ha 이상
2,169천명 (100%)	2,093천명 (96.5%)	70천명 (3.2%)	6천명 (0.3%)

□ 임산물 생산액은 3조 166억원(GDP의 0.5%)으로 약 50조원으로 평가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6.0%에 불과

(단위 : 억원)

계	순임목생장	조경재	수실류	버섯	용재(用材)	산나물·기타
30,166 (100%)	9,423 (31%)	6,292 (21%)	4,039 (13%)	2,534 (8%)	1,282 (4%)	6,596 (23%)

□ 목재의 높은 외재(外材) 의존도 지속

- 국내 목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재 공급은 6%에서 정체
 - 목재수요 : ('91) 10 → ('02) 31 → ('50 전망) 50백만 m³
- 값싼 외재의 시장지배로 국내 목재산업 정체가 지속

□ 임업은 경영기반이 빈약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

- 임도는 15천km(2.4m/ha)에 불과하여 경영비 과다 소요
 - 일본 5m, 미국 10m, 독일 40m/ha
- 임업 기계화율은 23% 수준으로 대부분 인력에 의한 산림작업
 - 농산촌 인구 감소 및 임금 상승으로 임업경영에 어려움
- 산림소유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협업경영체는 247개, 184천ha로 전체 사유림의 4% 수준

□ 산림의 공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가 소홀하고 이상 기후 등으로 산림재해 위험성이 증대

-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산림휴양 및 도시녹지 수요 증가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대형화, 빈발화
-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비해 투자예산은 미흡(정부예산의 0.5%)
 - 산주는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산림투자를 기피

최근 10년간 산림·임업구조 변화('92→'02)

산림 면적 : 연간 약 5천ha 감소

- 산림 면적은 6,464천ha → 6,412천ha로 52천ha 감소
- 임목 축적은 42m³ → 70m³으로 약 67% 증가
- 산주수는 1,954천명 → 2,169천명으로 다소 증가
 - 1인당 산림소유 규모는 2.4ha → 2.1ha로 감소

임업 생산 : GDP 대비 0.3%에서 0.5%로 증가

- 임업생산액은 8,251억원 → 3조 166억원으로 대폭 증가
 - 농림어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 → 12.8%로 증가
- * 산림의 공익가치 : ('90)23조 4천억원 → ('00) 50조원

목재 수급 : 목재수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총 목재 소요량은 22 → 31백만m³으로 증가
- 국내재 공급은 1,123 → 1,605천m³으로 6%대에서 정체

임산물 교역 : 수입은 증가, 수출은 감소

- 수입은 1,903 → 2,157백만 \$로 꾸준히 증가
- 반면, 수출은 574 → 180백만 \$로 크게 감소(1/3수준)

2. 산림·임업의 대내외 여건

대외적 측면

- DDA 협상 진행, FTA 확대 등 개방이 확대되고 국경 없는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UR 협상 보다 개방폭과 속도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관세 감축 폭과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인 압력 가중
 - UNFF, 몬트리올 프로세스 등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요구 강화
- 북한 산림복구 및 동북아 산림협력사업이 현안으로 부각
 -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병해충 방제사업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산림관리 구상이 필요
 - 중국·몽골 사막화방지 등 동북아지역 산림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대내적 측면

- 임업은 장기성과 저수익성,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타 부문과 성장 격차가 확대되어 산촌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
 - 값싼 중국산 임산물의 수입 확대로 임산물 가격 하락 및 농산촌 소득 하락이 불가피
 - 산촌 인구의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가 어려운 실정

-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지훼손 방지가 요구되는 가운데 산지이용수요 및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성이 증가
 -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여 다가올 국산재 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임업경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 증대
 - 백두대간 보전 및 산림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민적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화 등으로 산지이용 수요는 지속 증대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02년 동해안 대형산불, 태풍 '루사·매미' 등과 같은 산림재해가 대형화하고 더욱 빈발해질 전망
- 산림이 국민생활과 더욱 밀접해 지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관리 요구 증대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산림휴양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
 -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의 맑은물 공급 기능제고
 - 도시숲·학교숲 등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충 및 도로변 산림, 마을 숲 조성 등과 같은 경관림 조성 등
- 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선호 증가
 - 소비자는 가격보다 안정성, 신선도 등 품질을 선호
 - 따라서 임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도시민을 함께 고려하는 시장 지향적·다원적 산업으로 재편이 필요

3. 산림·임업 주요지표

산지이용 분야

□ 국토구조의 변화전망(제4차 국토종합계획)

(단위 : 천ha, %)

구 분	'90	'01
○ 국토면적	9,927 (100)	10,044 (100)
- 산 지	6,475 (65)	6,404 (64)
- 농경지	2,109 (21)	1,903 (19)
- 도시적 용지	444 (5)	573 (6)
- 수면·기타	899 (9)	1,164 (11)

□ 산림면적의 변화

- 2020년까지 도시적 용도로의 산지전용으로 산림면적은 감소
- 2020년 이후 그 감소 폭이 줄어들며, 2040년 이후에는 한계 농지의 산림전환 등으로 순증가 예상

* OECD 유럽국가 : 1980~1990간 산림면적 약 2백만ha(1.0%) 증가

□ 임지별 산림면적

- 생산임지 : 공공용지 등으로의 전용과 공익임지화로 약간 감소
- 공익임지 : 산림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확대에 점차 증가
- 준보전임지 : 타용도로의 전환과 생산·공익임지화로 계속 감소

임지별 산림면적 전망

(단위 : 천ha)

임 지 별	'98	'02	'07	'20	'40	'50
○ 산림 면적	6,452	6,412	6,374	6,317	6,283	6,288
- 생산임지	3,548	3,536	3,535	3,510	3,480	3,400
- 공익임지	1,429	1,426	1,515	1,555	1,705	1,800
- 준보전임지	1,475	1,450	1,324	1,252	1,098	1,088

산림자원 분야

□ 임목축적

- 2007년에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약 80m³에 도달 예상
- 임목성장율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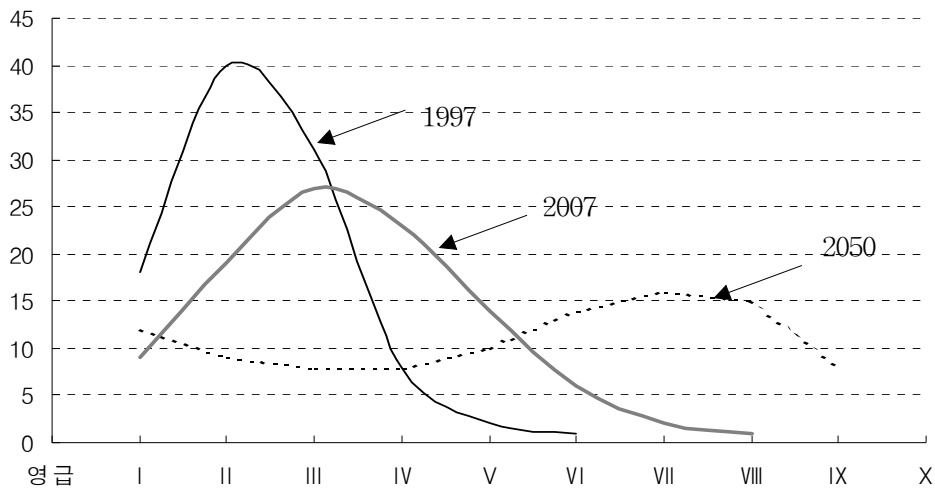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98	'02	'07	'20	'40	'50
○ 총 축적	백만m ³	364	448	512	699	927	1,016
- ha당 축적	m ³	56	70	80	111	148	162
○ 임목성장량	천m ³ /년	24,417	21,933	20,117	19,668	20,670	22,629
- 성장율	%	7.16	5.12	4.19	2.72	2.25	2.25

□ 목재수급

구 분	단 위	'98	'02	'07	'20	'40	'50
○ 목재수요	천m ³	20,081	29,047	30,848	35,886	46,135	49,526
○ 목재공급(내재)	천m ³	1,428	1,605	1,907	4,635	9,486	12,754
- 총목재 자급율	%	7.1	5.5	6.5	13.1	23.4	30.3
○ 임목비축량	천m ³	22,737	20,109	17,873	14,215	9,510	7,624
○ 지속가능생산지수	-	0.11	0.12	0.14	0.30	0.54	0.69

□ 영급구조 전망

영급비율(%)



산림환경 분야

□ CO₂ 흡수량 및 탄소저장량

- 임목축적 증가에 따라 CO₂ 흡수량 및 탄소저장량 모두 증가

구 분	단 위	'98	'02	'07	'20	'40	'50
○ CO ₂ 흡수량	천tC/년	9,564	11,048	10,435	10,549	10,715	11,577
○ 탄소 저장량	백만tC	176	221	276	389	521	569

□ 산림바이오매스 및 산소발생량

- 산림바이오매스 및 산소발생량은 점차 증가

구 분	단 위	'98	'02	'07	'20	'40	'50
○ 산림바이오매스량	백만톤/년	19.1	22.1	20.9	21.0	21.4	23.2
○ 산소 발생량	백만톤/년	20.4	23.6	22.3	28.0	28.5	30.9

□ 기타 주요지표

- 도시숲 면적은 '07년 이후 크게 증가
- 산림의 녹색댐 저수량도 산림이 건강해짐에 따라 증가 전망

구 분	단 위	'98	'02	'07	'20	'40	'50
○ 도시숲 면적 (특·광역시)	m ² /인	-	6.2	7.0	10.2	15.2	17.7
○ 녹색댐 저수량	억톤/년	180	188	196	215	244	252

4. 앞으로 풀어야 할 중점과제

가. 산림·임업의 SWOT 분석

<p>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성공 및 자원화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성공지 180만ha(산림의 28%) • 숲가꾸기 최적기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21~40년생) 산림이 60% • 국산재 공급능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천만m³ 임목축적 증가 	<p>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격의 외재 종속(관세 0%) • 저수익성(IRR 1~3%) • 사유림 경영·지도체제 미비
<p>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근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산림휴양수요 증가 • 임업에 유리한 국제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인증제 등 SFM 강화 - 탄소배출권 인정(교토의정서) • 통일대비 북한 황폐지 복구 	<p>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등 개방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잣, 대추 등 고관세 임산물 • 기후변화와 산림재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산사태의 대형화, 빈발화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 등)

나. 산림에 대한 일반 인식

□ 일반 국민('01 갤럽조사)

- 중요한 산림기능 : ①환경휴양(54%) ②재해방지(34%) ③목재생산(8%)
- 산림정책 우선 방향 : ①생태계 보호(52%) ②경제림 조성(22%) ③휴양시설 확충(12%)

□ 산림 소유자('03 갤럽조사)

- 산림 보유목적 : ①상속(48%) ②재산가치(20%) ③목재생산(15%)
- 임업투자 저해요인 : ①저수익성(42%) ②노동력(24%) ③자금(18%)
- 산주 지원정책 : ①자금(31%) ②사업대행(22%) ③기술지도(19%)

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 생태·환경적 관리를 강화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가치있게 육성
- 전국의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에 따른 관리체계 확립
-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 방법을 생태적인 저비용 구조로 전환
- 백두대간 등의 관리 및 산림생물종의 다양성 유지·증진 강화

□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의 경쟁력 제고

-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임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 국산재 시대 및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유통체계 정비
-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실행능력을 제고하고,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
- 세제·금융제도 개선, 보험제도 도입 등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 산림재해방지 및 친자연적인 산림관리체계 확립

- 예방 위주의 전문화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체계 강화
- ‘산지관리법’의 엄정한 시행을 통한 산지의 난(亂)개발 방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관리

- 5대강유역 산림을 잘 가꾸어 맑은 물 공급기능 확대
- 도시·학교 숲 등 생활권 숲 조성을 ‘제2의 녹화운동’으로 전개
-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관리
-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녹색관광 등을 통한 산촌 개발

□ 산림자원외교 확대 및 북한산림관리

- 지구산림 보전과 자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 산림외교 전개
- 황사방지를 위한 동북아 산림협력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 확대
-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수해방지사업 등 당국간 협력 강화

Ⅱ. 향후 10년간 추진계획

1.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가. 정책 목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림산업 육성
- 산림재해 및 산지훼손 방지로 국민생활 안정 및 산림환경 보전
-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 확충

나. 추진 전략

- ◇ 산 림 :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건강하고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
- ◇ 임 업 :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고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
- ◇ 산림환경 : 다양한 산림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산림 재해를 방지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 ◇ 산 촌 : 풍부한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녹색 관광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거주공간 조성
- ◇ 산 지 :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난(亂)개발 방지
- ◇ 지구산림 : 지구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등 남북 정부간 협력 강화

2. 패러다임의 전환

- ◇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임업은 개방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 경제적 효율성 ⇒ 생태·환경적 건전성 중시
 - 산지 산림자원 ⇒ 생활권 녹지공간 포함
 - 물량 위주의 양적 확대 ⇒ 품질 중심의 질적 성장
 - 정부주도 ⇒ 국민 참여와 지방분권화 구현
 - 국내 산림 ⇒ 남북한, 국제협력으로 확대

산림기능 : 경제적 효율성 → 생태·환경적 건전성 중시

- 목재생산 위주에서 공익적·사회적 기능으로 확대
- 생태·환경 등으로 산림정책의 외연 확장
- 산림의 맑은 물 공급 및 산불·산사태 등 재해방지 기능 제고
- 산림의 기능별 관리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

산림범위 : 산지 산림 → 생활권 녹지공간을 포함

-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휴양수요 충족
-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행정을 구현

지원방식 : 물량위주, 양적 확대 → 품질중심, 질적 성장

- 평균적 지원에서 가능성 있는 품목과 임업인을 선택, 집중 지원
- 시설위주에서 정보제공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 임산물은 증산에서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을 우선
- 생산·유통 부분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

추진체계 : 정부 주도 → 국민 참여 및 지방분권 구현

- 국민 참여에 의한 다양한 국민의 숲을 조성
- 지자체의 자율성 신장 및 지역 특성 산림사업 확대
- 산불예방, 산지훼손 감시활동 등에 민간단체와 국민참여 활성화

정책영역 : 국내 임업 → 국제·남북 임업협력으로 확대

- 북한 황폐산림 복구, 금강산 병해충 방제 등 남북임업사업 확대
- 중국·몽골 사막화 방지조림 등 동북아 산림중심국가 역할

산촌성격 : 정주공간 → 생산, 녹색의 정주 및 휴양공간

- 국민이 여가·휴양을 즐기는 국토공간으로 조성
- 산촌에 풍부한 녹색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산촌개발 추진

3.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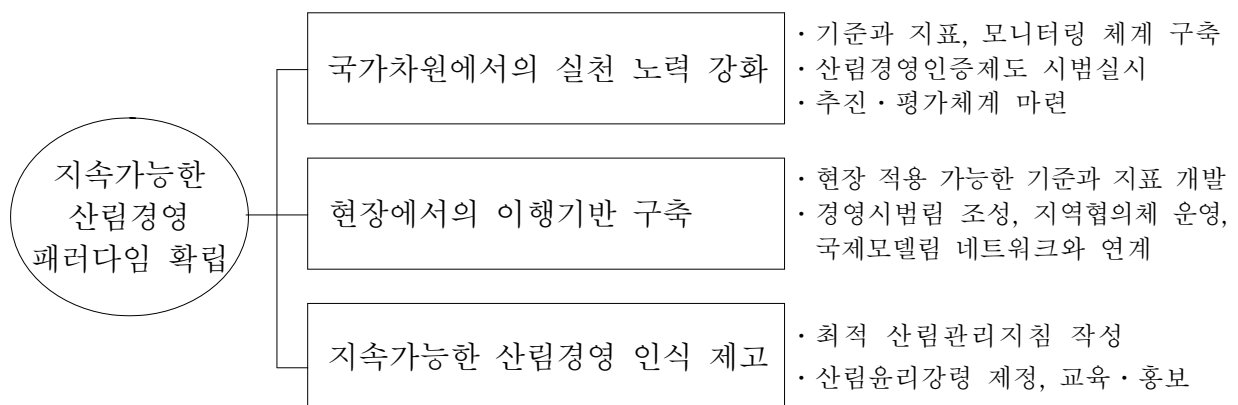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의 패러다임 확립

- 산림윤리강령 제정 및 최적 산림관리 지침 작성
 -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산림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실천
 - 산림윤리강령 제정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교육·홍보 강화
-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 노력 강화
 - 우리나라 산림에 적용 가능한 기준과 지표 확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산림경영인증제도 시범 도입·실시 및 추진·평가체계 마련
- 현장에서의 이행기반 구축
 - 경영시범림 조성 및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지표 개발
 -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제모델링 네트워크와 연계
- 작업종별 예산구조를 수원함양 등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변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산림통합관리권역’ 설정 및 시범사업 추진

- 행정구역을 탈피한 생태·환경적 산림관리권역 설정·운영
 - 전국 산림을 경제적·생태적 특성에 따라 17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특성 및 관리목표 마련하여 지자체·임업인 등 의견 수렴
- 시범사업 추진
 -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04년부터 1개 권역에 시범사업 추진
 - 권역구분에 사용된 관련인자 등에 대한 DB 구축

② 산림의 기능별 관리체계 구축

□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기능구분을 실시하고 기능별 관리체계 구축

- 산림기능구분 및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 산림기능(6) :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생활환경보전, 산림휴양 생태보전, 목재생산
 - '04년까지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06년부터 현지검토 및 적용
- 산림기능구분도에 따른 기능별 산림관리 방안 마련
 - 기능별로 차별화된 사업방법을 마련하여 국유림에 우선 적용

③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

□ 산지관리법으로 마련된 산지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사전심의제도, 채석허가 기준 강화 등
-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민간차원의 산지훼손 감시활동 전개

□ 산지이용구분 제도 정비

- 산지이용 수요 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
-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산지이용구분도 정비

(2) 산림의 경제적 기능 증진

①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숲을 자원화

□ 산림정책 방향을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경제림 육성

-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하고 단지별 경영계획을 수립
 - '04년부터 5년간 100만ha를 가꾸기 위해 7,600억원 투입계획
 - 공익적 편익 증대 30만ha, 재해예방강화 20만ha, 경제적 기능제고 50만ha
 - 2013년까지 10년간 대상지 215만ha에 15,000억원 투자

□ 경제림 육성단지 확대 지정

- '07년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별로 경영계획 수립 등 제도 정착 도모
- '30년까지 임업경영 여건과 임지 생산력 등을 감안하여 확대 지정

<경제림 육성단지 추진체계>

계획수준	수립기관	내 용
종합대책	산 립 청	○ 각 기관별 계획 수립 기준 제시
		⇓ 제시
시·군·구 ·관리소별 경제림육성 계획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경제림 육성 대상지 실태 조사 ○ 대상지 현황 및 사업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연차별 육성계획 수립 ○ 실행계획에 따른 영림계획 변경
		⇓ 검토·수정
시·도· 지방청별 경제림 육성계획	시·도 지방산림관리청	○ 시·도, 관리청 단위 광역권 계획 수립
		⇓ 검토·수정
경제림 육성계획	산 립 청	○ 전국단위 기본계획 수립

○ 조림·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경제림 확보와 영급구조 개선을 위해 조림 확대
- 간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사업 확대
- 리기다소나무림(481천ha)의 계획적인 벌채 및 갱신 추진
- 향토수종인 소나무·참나무를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

○ 조림·육림 사업방법 개선

- 자연친화적인 생태적 조림·육림방법 개발·보급
-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육림방법을 구분하여 차별화
- 침엽수 위주에서 침·활엽수 균형이 맞도록 조림
- 육림사업 설계·감리제도 실시 및 육림사업 공정 차등 적용

○ 조림수종 정비

- 기후대별 대표수종을 주·부수종으로 단순화하여 조림권장 수종 선정
- 유실수, 단기소득을 위한 특용수종 조림은 현행대로 추진
- 국산재 산업과 연계하여 수종별 조림방향 정립

<주요 수종의 조림방향>

주요 수종	조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등 · 낙엽송, 삼나무, 편백, 자작나무 등 · 잣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보다 확대 · 현수준 유지 · 현재보다 축소

○ 한계농지 등에 대한 산림자원 조성 촉진

- 한계농지의 산림자원 조성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센티브 마련
-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조성 추진

□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 유전적으로 검증된 우량종자를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07년까지 채종원(採種園) 조성을 완료(889ha)
 - 채종원산 종자 공급률 : ('02) 24% → ('40) 100%
 - * 채종원 :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접 조성·관리
- 우량종묘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용 종자의 생산지증명 및 종묘품질보증제도 운영
 - 국제적 기준(OECD/CFRM)에 맞는 종자의 생산지증명제도 강화
- 양묘산업의 경쟁력제고와 북한산림복구에 대비하기 위해 양묘장의 규모화·기계화 추진

② 경제림 육성기반 정비

□ 견실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

- 시설기준 강화 및 단비 현실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 임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 신설임도는 새로운 공법으로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03) 15,510km → ('08) 17천km → ('30) 41.6천km
 - (2.4m/ha) (2.7m/ha) (8.5m/ha)
 - * 적정임도밀도 8.5m/ha 구축시 연간 경영비 24% 절감가능
 - 기존임도는 2006년까지 구조개량을 완료하여 재해에 강한 친환경적 임도로 전환
 - ('03) 4,495km → ('06) 9,297km

□ 임업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제고

- 목재수집·운반작업의 생력화(省力化)를 위해 임업기계화 추진
 - 기계화율 : ('02) 23% → ('07) 28% → ('30) 50%
- 한국의 산악지형에 맞는 임업기계와 장비를 개발·보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및 임업용 석유류 면세
- 산주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 확대
 - ('02) 2개소 → ('03) 4 → ('07) 10 (도별 1개소 이상)
- 국유림에 기계화시범단지를 운영하여 민간교육의 장으로 활용
 - ('02) 5개소 → ('07) 10개소

□ 숙련된 임업전문노동인력의 안정적 확보

- 숲가꾸기에 투입할 임업기능인 영림단(營林團) 육성
 - 기능인 : ('02) 5,605명 → ('08) 10,000명
- 임업 작업현장을 지도할 숙련된 전문기술인 양성
 - ('02) 487명 → ('07) 940명

③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자율적인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 협업경영 활성화
 - 협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차등 지원
 - 실적이 저조한 협업체는 통·폐합하여 경영개선 및 규모화 유도

- 독립가·임업후계자에게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독립가는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전문경영인의 경영참여 확대
 - 자영독립가는 산림경영 면적이 15ha이상이거나 조림실적이 5ha (유실수 3ha)이상으로 요건을 완화
 - 법인독립가는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산림경영 참여를 확대
 - * 산림면적 : 500ha → 300ha, 조림실적 : 300ha → 100ha
 - 임업후계자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산림경영인으로 육성
 - 현행 5ha이상의 산림소유 요건을 5ha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전환
 - 산림경영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을 통한 기술·정보제공 강화
- 대리경영 본격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사업 예산배정시 대리경영사업 별도 배정
 - 전년도 대리경영 실적을 반영하여 다음해 예산 차등 지원
-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 임업의 장기·저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개선
 - 산림경영의 공익성, 장기·저수익성이 반영되도록 개선
 -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추진
 - 용자기간 연장 및 경영체별 종합자금지원 방식으로 전환
- 소득안전망 구축 및 신규 투자재원 발굴
 - 산림재해로 인한 위험분산을 위해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 산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림부문 직접지불제도 도입 검토
 -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및 탄소흡수세 신설 등 신규재원 확보 추진

④ 임업경쟁력 제고 및 임업인 소득증대

□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

- 수확기에 도달한 국산재 생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국산재 공급 확대
 - 국산재공급률 : ('02) 6% → ('10) 10% → ('20) 17% → ('30) 22%
- 낙엽송·편백 등 벌채기에 도달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산주와 목재산업체를 연계하는 수급체계 마련
- 국산재의 신수요를 개발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이용촉진
 - 국산재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산림분야부터 시범 실시
 - 책·결상, 교실바닥, 방음벽, 담장 등을 목재로 대체토록 권장
 - 톱밥, 목탄, 목초액(木醋液) 등을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육성
- 간벌재 수집체계 개선 및 이용촉진
 - 펄프·찰 등으로 활용되도록 수집비용 지원방안 강구
- 해외조림을 확대하여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으로 목재수요의 50% 충당
 - 해외조림 : ('02) 8만ha → ('08) 13만ha → ('30) 70만ha
 - 향후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하여 대기업 등 참여방안 강구

□ 『산지목재비축제도』 도입·운영

- 대경재 생산 및 산주소득 안정 등을 위해 목재비축림 지정
 - 벌채시기에 도달한 산림을 소유한 산주에게 계약기간(10년) 동안 벌채유보 조건으로 예상수입금의 70%까지 저리융자
-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03) 30천m³ → ('07) 1,314천m³

□ 목재유통·가공·소비체제 개선

- 목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목제품질인증제도』 도입 (2004. 7)
 -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부터 실시 후 품목확대 추진
- 목제품의 규격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 원목, 제재목, 합판 등 6개 품목
- 낙엽송 등 국산목재의 가공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부가가치 및 이용도 제고
 - 잣나무, 낙엽송을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등
- 시민단체, 학계,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목재문화포럼을 통해 민간주도로 홍보 추진

□ 버려지는 건축자재, 가구 등 폐목재 재활용 촉진

- 폐목재 재활용 의무대상 업체 확대 및 수집체계 개선
- 폐목재 재활용률을 현재 32%에서 2008년까지 50%로 제고

□ 산림소득 전략품목 육성 및 임산물 수출 확대

- 밤·표고산업 육성
 - 노령 밤나무 갱신, 토양개량, 작업로 시설 및 기계화 지원 등
 - 표고 신품종(원목 6종, 톱밥 3종) 개발 및 생산시설 규모화 지원
 - 표고자목 생산구역 제도 정비 및 톱밥표고 생산중심으로 전환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림수산물물류센터 운영 및 임산물 저장시설 확대
 - 밤 등 임산물의 출하조절을 위한 임업관측사업 확대
- 조정수·분재 등의 수요촉진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개최
- 임산물 수출 확대
 - 품목별로 시장별 수출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수출전략 수립·추진
 - 신규 유망 수출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3) 산림의 생태적 기능 제고

①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강화

□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관리 강화

- 보안림 지정 및 해제시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
- 보안림 등 법정제한림내 산림사업을 확대하여 공익기능 제고
- 백두대간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확대

* '30년까지 산림보호지역을 전체 산림의 25% 수준으로 확대

□ 전통산림자원 지정·관리제도 도입

- 보호수 제도를 '전통산림자원보호' 제도로 전환
 - 전통산림자원의 지정 및 DB구축 등 국가주도로 추진
- 수목보호기술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나무의사 제도 도입

□ 백두대간 보전·관리 강화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및 시행령 제정 추진
- 적극적인 주민지원 방안 강구
- 비무장지대(DMZ) 보전·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산림부문 보전대책 수립, 생태계 조사 및 산불방지 등 공동사업 제안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 강화

- 과학적·생태적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확립
 -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환경친화적인 방제기술을 정착시키고 임업적 방제 확대
- 산림식물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및 보전·관리 강화
 - 식물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및 총량예측모델 개발
 - 국가식물목록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표준식물목록 정보 제공
 -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등을 지역별로 특색있게 확충

② 산림의 맑은 물 공급 및 탄소흡수·저장 기능 확충

□ 5대강유역의 수원함양림 101만ha를 중점관리

- 수원함양보안림을 확대 지정하고 연차별로 국가에서 매수
 - 수원함양림 관리사업을 통합하여 별도의 사업예산 확보
 -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인식 제고
-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성 강화
 - 수계를 중심으로 숲가꾸기·사방사업 등을 통합하여 실시

□ 산림의 탄소흡수·저장기능 제고

- 수집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량 추정, 공급 가능성 평가 및 열효율성·경제성 평가 등 기초연구 실시
- 산림바이오매스(Biomass) 활용 촉진
 - 목재 등을 사용하는 보일러시설 및 열에너지 공급 확대
 - 연료 제조시설, 난방용 소각시설 및 원료 운반차량 등 지원

③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관리

□ 사유림 및 법정제한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집단화

-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국가직영임지 확보
 - '20년까지 사유림 48만ha를 매수, 국유림을 30% 수준까지 확대
- 보안림 등 법정제한지역에 편입된 사유림 우선 매수

□ 국민참여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국유림 관리모델 도입

- 체험·자원봉사·사회환원·산악레포츠의 숲 등 조성
- 국민, 기업, 동호회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 등 편의 제공

(4)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

①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 산사태 방지

- 전국의 산사태위험지 도면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제공
- 사방댐 등 사방시설 확충
 - 사방시설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사방을 대폭 확대
 - 사방댐 : ('02) 1,133개소 → ('08) 3,300개소 → ('13) 5,300개소
- 방재형(防災型) 산림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
 - 재해발생우려지에 대한 산주 일괄동의 및 산림사업 대집행제도 신설
 - 산지재해방지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소 확충

□ 과학적인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시스템 구축
- 첨단장비 및 시설 확충으로 전국 30분 이내 출동체계 완비
 - 현재 헬기 36대(격납고 7개소)를 '06년까지 48대(격납고 8개소)로 확충
 - 무인감시카메라는 '06년까지 전국 200개소에 확대 설치
 - 헬기에 위치판독장치(GPS)를 설치하고 산불진행 예측시스템을 통한 산불의 과학적 진화체계 확립
- 취약지 집중관리 및 산림연접지의 산불요인 사전 제거
 - 산불위험경보시 등산로 80% 이상 입산통제(3,026개소, 2,640천ha)
 - 논밭두렁은 가을철부터 익년 3월중순까지 계획적으로 공동소각
- 지상진화인력을 전문인력체제로 개편
 - 산불전문진화대를 확대 운영 : ('03) 2,256명 → ('05까지) 5,000명
 - 기능인영림단(5천명), 공익근무요원(6천명)을 진화보조요원으로 활용

② 도시 숲 확충

□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다양한 형태의 지역 특색숲 조성을 통해 생활권주변 녹색공간 조성 확대
 - 도심에는 자투리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태형 도시숲을 조성
 - ('03신규) 5ha → ('08) 560ha
 -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특색숲 조성
- 교육부, 지자체, 시민단체 공동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중심 숲으로 활용 : ('08까지) 3,430개교
- 「아름다운 마을숲」을 연차적으로 조성 확대
-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심 및 외곽산림과 연결되는 녹지축으로 조성 : ('07까지) 45천km

* 1인당 도시숲 면적을 FOA 권고수준(9㎡/인)으로 제고

□ 도시숲 자원관리체계 강화

- 전국 도시숲 현황에 대해 시·도 단위로 일제조사 추진('04~'07)
- 도시숲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및 기능·특성별로 관리방안 정립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제도정비

- 도시녹화재단 등 시민단체·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 기업, 개인 등이 토지 또는 나무, 자금을 모아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과 matching fund 형태로 조성
-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녹색지표 제도 도입
- '도시숲조성및보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③ 산림휴양·문화 진흥

-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
 - 6대 권역별 휴양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전문 휴양림 조성 확대
 - 산림휴양시설 : ('02) 92 → ('07까지) 140개소
 - * 1일 숙박능력 : ('02) 7천명 → ('03) 8천명 → ('07) 14천명
 - 수변(水邊)휴양림, 승마(乘馬)휴양림 등 레저문화와 연계한 특성화된 휴양시설 조성 추진
 - 산림공원, 종합산림휴양단지 조성 및 고향의 숲 정비
 - 주요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관리하고 훼손된 등산로 정비
 - 등산로 정비 : ('03) 54km → ('08) 1,000km
 - 산림휴양시설 타당성 평가제도 및 산림휴식년제 도입·운영
 - 산림문화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 산림현장, 한국의 100대 명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 '산의 날'이 속한 주를 '산림문화주간'으로 선정하여 문화축제 개최
 - 산림교육·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요 대도시에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조성 운영('12까지 3개소)

④ 산촌을 살기좋은 거주공간으로 개발

- 전국 2,043개 개발대상마을 중 '08까지 240개 마을을 개발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
 - 산촌 녹색관광 프로그램 운영
- 농산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마을숲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 '07년까지 100개소의 녹색관광 거점마을을 선정하여 지원

(5) 국제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

① 남북 및 국제 산림협력 강화

□ 남북한 산림협력 강화

○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 임진강 유역 황폐산림 복구 등 공동이해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 양묘장 복구 및 복구기술 전수 등 능력 배양 지원에 중점
- 황폐산림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중장기 복구대책을 수립·추진
-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민간단체의 참여 보장

○ 장기적으로 북한 황폐산림실태 공동조사 및 항구적 복구대책 수립

- 북한의 산림황폐지 면적을 163만ha 추정(북한 전체산림의 18%)

□ 국제 산림협력 강화

○ 산림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대응 강화

- UN 산림포럼의 국제산림규범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
- 임업연구기관국제연맹(IUFRO) 등 국제산림회의 적극 유치

○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자원외교 강화

- 주요 자원보유국과 임업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장기안정적 원자재 확보 및 진출업체 지원
 - 인니, 미얀마, 베트남 등 7개국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정례회의 개최

- 진출 유망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정보 제공

○ 황사방지를 위한 중국·몽골 사막화방지 협력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과 연계하여 조림사업 참여
 - 내몽골, 감숙성 등 5개소 8천ha 조림중('01~'05년, 5백만불)

② 임업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 임업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 정책수요 및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연구기술개발 강화
 - 연구과제 선정·추진시 정책부서와의 연계 강화
 -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센티브제 확대
 -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지역 임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연구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첨단임업기술개발 촉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및 평가·모니터링기술 개발
-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위한 관리기술 개발
 -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 생활녹지 조성, 산림재해 방지 등
- 생명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임산자원 발굴 및 응용기술개발
 -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고부가가치 창출기술 개발
 - 목재자원의 신수요 창출 및 순환형 첨단 이용기술 개발
- 도시림 기능강화 및 친환경적 산지관리체계 연구 추진
-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산림재해 종합연구 체계 구축
- 산림자원 지식정보의 체계화

□ 임업연구성과의 보급 및 활용의 활성화

- 개발 완료한 우수 연구성과의 보급 및 상품화
 - 밤, 호도의 신제품 등록, 포플러의 환경저항성 유전자 특허 취득
 - 기술보급 및 정보활성화를 위한 임업기술컨설팅제 도입
-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술장터’ 운영, 연구성과에 대한 현장 설명회 등으로 새로운 임업기술정보의 보급 확대
-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연구·현장의 연계성 강화

Ⅲ. 주요 품목별 대책

1. DDA 협상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

- 목재는 연간 약 3천만m³이 소요되나 목재자급율은 6%에서 정체
 - 국산재는 대부분 간벌재로 주로 펄프·보드류 원료로 사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1조 5천억원 규모로 재배면적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 추세
 - 밤은 재배면적 79천ha로 연간 9만톤(22백억원) 생산
 - 표고버섯은 재배면적 2,616ha에서 5,247톤(2천억원) 생산
 - 조경수·분재 등 관상자원 재배는 13천ha로 6,300억원 생산
- 선진국 기준으로 개방될 경우 목재류 및 단기소득임산물 모두 UR관세 감축폭 보다 큰 폭의 감축이 예상
 - 목재류는 평균 40%이상 감축될 전망으로 UR당시 미양허한 합판, 섬유판에 영향이 클 전망
 - 밤, 대추 등 고관세 품목은 큰 폭의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가 예상
-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임산물은 전업 임가 및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 위주로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 임산물 생산에 중점
 - 목재산업 : 시설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
 - 밤 : 노령목 갱신, 작업로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표고 : 톱밥재배 및 시설재배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 관상자원 : 단지화·규모화 등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

2. 목재산업

- ◇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재 생산·공급기반 확충
- ◇ 목재제품의 **표준화·규격화**로 품질향상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
- ※ 국내재 공급은 지속 확대 : ('02) 1.6 → ('13) 3.5백만m³

-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쟁력 제고
 - 제재소 등 목재가공시설 및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국산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낙엽송·잣나무 등을 합판용재 등으로 공급 추진

- **국산재 생산·공급기반 확충**
 - 목재산업별 국내재의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예측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수급 유도
 - 별채시기에 도달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국산재 활용계획 수립 및 산·학·연이 연계하여 신용도, 신기술 개발 체제 구축
 - 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을 국산재 생산·유통 중심지로 육성
 - 별채 및 운반 장비의 기계화, 용도별·등급별 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
 - 간벌재 수집비 지원 및 임산바이오매스 활용 등 이용 활성화

- 목재제품의 **표준화·규격화** 및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보호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촉진
 - 원목, 재제목, 합판 등의 KS규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목조건축 부재 등에 대한 규격 제정
 - 목탄, 목초액 및 방부처리 목재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04.7월) 및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으로 확대 추진

3. 밤

◇ 경영기반 조성으로 연간 9만톤 생산에 3만톤 수출 유지

◇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 고급화

* 수출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

- 생산 : ('02) 96→ ('10) 89→ ('13) 90천톤

□ 안정적인 생산·경영기반 조성

○ 밤나무 재배면적의 66%를 차지하는 노령목(18년 이상)은 매년 3~4천ha 규모로 갱신하여 2010년까지 완료

○ 저수고 재배 등 집약적 기술재배 및 작업로 시설,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저수고 재배 : ('03) 1,500→('04) 1,500→('05 이후) 2,000ha/년

- 작업로 시설 : ('03) 1,100→('04) 1,300→('05 이후) 1,500km/년

- 토양 개량 : ('03) 3,312→('04) 6,734→('03 이후) 7,000ha/년

○ 유기농법 및 병해충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등 환경친화적인 밤생산 기반 구축

○ 국내 및 중국의 밤재배실태 조사결과('02~03년)를 토대로 밤산업 종합대책 보완, 추진

□ 유통구조 개선, 신제품 개발·보급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촉진

○ 공동선별, 공동브랜드화 출하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산림조합,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 수출에 유망한 알이 크고 가공이 쉬운 조생종 신제품(3종) 개발

○ 부가가치 증진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및 생산권역별로 밤박피 가공공장 설치 지원('05년까지 5개소)

4. 버섯류(표고, 송이)

- ◇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 신제품 개발과 재배관리기술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 표고는 연평균 6%이상 증가, 송이는 감소 전망

- 중국의 저가 표고 수입에 대응하여 생산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여 경쟁력 확보
 - 현대화된 시설재배 확대로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시설재배 면적 : ('02까지) 961→('05) 1,300→('13) 2,000ha
 - 자원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고톱밥재배모델 개발·보급 및 톱밥재배시설비 지원 확대
 - 신제품 개발·보급, 재배관리기술 개발로 고품질 표고생산 체계 구축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 창출
 -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적합한 종균(원목 6, 톱밥 3종) 개발 및 UPOV에 대비하여 우량품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표고톱밥 연중재배 시스템 개발 및 자연재배법 연구 추진
- 송이는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산 증대
 - 송이생산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생산량과 수출이 감소 추세
 -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재배기술 개발로 생산 증대
 - 송이환경개선 사업 : ('02) 1,600 → ('13) 2,000ha

5. 관상자원(조경수, 분재)

- ◇ 대중성이 있는 전략품목 위주로 단지화·규모화 추진
- ◇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및 수출 상품화로 신수요 창출

-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취미생활 확대로 조경수·분재 등 관상 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관상자원 생산은 대중화가 가능한 전략품목 위주로 단지화·규모화 추진
 - 직거래 유통체제 구축 및 수요·공급 촉진을 위한 유통단지 조성
 - 유통단지 : ('04) 1 →('13년까지) 7개소
 - 수출용 분재생산을 위한 온실 등 시설재배자금 확대 지원
- 새로운 기술개발로 관상자원의 신수요 창출
 - 무궁화, 대나무 등 조경수종의 우량품종 육성 관상소재 개발
 - 공동주택의 분재관리기법 개발 등

6. 산채류·수액(樹液)

- ◇ 재배기술 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로 수입산과 차별화
- ◇ 환경친화적인 수액채취 정착으로 산림자원과 환경 보호

- 산채류는 산지를 이용한 청정 식·약용식물 재배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재배관리 기술 개발·보급
- 수액자원은 천연림에서 채취를 지양하고 고로쇠나무 조림 등 수액자원 조성 확대
 - 연중 유통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및 약리효과 연구 등

추진 일정(로드맵)

구 분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이후)
경제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추진 - 고급재 생산단지 지정 및 기술 개발·보급 - 산림자원관리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별 관리계획 수립 - 한계농지 실태분석 및 산림조성 계획 수립 - 공익·재해예방 숲가꾸기 강화 (관계부처·기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별 산림관리 계획에 따라 조림·육림사업 집중
사유림경영개선, 임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금융개선 ○ 목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재해공제제도 시범사업 ○ 직접지불제 도입 연구 및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양도소득세 면제 ○ 산림재해공제제도 전면 도입 ○ 품질관리품목 확대
산촌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 	
산림공익기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도시숲 실태조사, 관련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지역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 도시숲 녹색총량제 도입 ○ 나무의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추진 ○ 등산로 D/B 구축 ○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조성
산림재해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관리시스템 보완 : GPS 구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개년계획 실행 ○ 산사태위험지도 제작·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현대화 및 지속 확충
산지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시행 - 산지보전협회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이용 구분도 타당성 조사 및 도면 정비 	